

[별지12]

11-24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여기구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양이원영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원자력과 화력에 기반한 전력정책의 전환 방향
	계약금액	일금 일백만원(₩1,000,000원)
계약기간		2016. 9. 01. ~ 2016. 10. 07.
	기타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 역 결과물 각 1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1. 1.

국회의원 여기구

[작성자 도소연 (성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적¹⁾

- 전력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이 전력 수요를 계속 담당해야 하는가?
- 신재생에너지가 전력 수요를 담당해 나갈 방안은 없는가 ?
- 전기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9. 1 ~ 2016. 10. 7
- 연구자²⁾ :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3. 주요 내용³⁾

- 전력수요예측의 오류 바로잡기
- 전력수요관리의 필용성
- 발전설비 과잉,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 줄일 방안
-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 줄여도 추가 요금 부담 미미
- 수도권 전력 자립 가능성
-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대안 전력정책의 가능성과 희망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1. 전력수요 예측의 오류 바로잡기
2. 전력수요관리의 필요성: 냉난방 전기소비 수요관리 시급, 일반용 누진제 도입 필요
** 이슈 정리 1) 주택용 누진제 요금 개편 시 고려사항
3. 발전설비 과잉,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 줄일 방안: 전력거래소 우선 매입 순서 개선 필요
**이슈정리 2) 지진 위험 지역 원전 밀집: 전력 안정성 위협으로 블랙아웃 가능성
4.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 줄이는데 추가 전기요금 부담은 미미: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5. 수도권 발전설비만으로도 전력자립 가능: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으로 불균형 해소 가능
6.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만도 원전 9천개와 맞먹을 정도: 제도 도입 시급

164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별주처	여기구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신범철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경기대학교 교수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계약금액	일금 이백이십만 원(₩ 2200,000 원)
	계약기간	2016. 10. 1. ~ 2016. 12. 10.
기타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9.

국회의원 어기구



[작성자 도소연 (현명)]

[별지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이 연구보고서는 CGE 모형을 기반으로 한·중·일 FTA로 인한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새로운 GTAP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
 - 관세인하의 경제효과는 CGE 모형을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 非무역장벽 철폐의 효과는 협정문의 조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임.
-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중국경제의 부상, 생산네트워크의 국제화, 무역전환효과의 피해 전략과 여타 국가와의 연쇄적 FTA 체결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주장들의 합당성은 FTA로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을 것임.
 - 따라서 이 연구는 한·중·일 FTA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고 그 가능성을 논의.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10.1. - 2016.12.10
- 연구자 : 신범철(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정태 CGE 모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GTAP 자료를 사용하여 한·중 및 한·일 FTA, 한·중·일 상호간 자유무역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계하여 비교·분석
- 완전 관세철폐의 경우, 한·중 및 한·일 FTA 체결은 한국의 실질 GDP를

0.07%~0.60% 증가시키고, 한·중·일 상호 간 자유무역 체결은 한국의 실질 GDP를 0.28%~0.65%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상되어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중 FTA와 한·일 FTA의 경제효과를 비교해보면 전자의 한·중 FTA의 경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한·중·일 FTA가 체결의 경제효과가 크지 않지만,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3개 국가 중 한국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됨.
 - 이 결과는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더 커진다는 전통적 이론을 지지.
- 한·중·일 FTA가 동시에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한·일과 한·중 FTA 효과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기 보다는 대체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 효과를 서로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결과는 한·중·일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의 경제효과가 각각의 FTA 경제효과의 합보다 작게 나타나기 때문임.
- 이러한 결과는 현 정부의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 방향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
- 마지막으로 2004년 기준 GTAP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한·중 및 한·일 FTA 경제효과가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나고 있고 한·중·일 상호간 FTA 자유무역의 거시경제효과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01년 기준의 GTAP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선행연구가 한·중 및 한·일 그리고 한·중·일 FTA 체결의 경제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CGE모형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비교

신범철*

I. 문제 제기

FTA의 경제효과는 일반적으로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CGE모형에 의해 평가되어 왔다. 중력모형은 국가 간의 무역이 국가 간의 거리와 문화적 유사성, 소득, 교역당사국 규모의 유사성, 교역국가 간 1인당 국민소득격차, 언어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전제에서 FTA의 경제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 중력모형에 의해 FTA 경제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 중력모형은 교역시장의 단일, 부분균형 모형의 접근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간, 상품간, 국가간 무역 변화를 고려치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가 多부문, 多지역을 고려한 이른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하고 있다.

이 연구는 CGE 모형을 기반으로 한·중·일 FTA로 인한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새로운 GTAP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관세인하의 경제효과는 CGE 모형을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 非무역장벽 철폐의 효과는 협정문의 조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GTAP v.7 DB는 미국 페듀대학의 세계무역분석센터(Center for Global Trade Analysis)가 2008년 11월에 새로이 출시하였다. 이 새로운 GTAP v.7 DB의 기준연도가 2001년에서 2004년으로 바뀜에 따라 36개국의 투입-산출(Input-Output)표가 개선되었으며 수입관세율 등을 포함한 기존의 자료 중 상당 부분이 보완되었다. 또한 대상국가도 87개에서 113개 국가로 그 수가 늘어났으며 무역 시계열자료도 1992년~2006년 기간으로 연장되었다.

무역자료의 기준연도가 2001년도에서 2004년도로 변화됨에 따라 한·중·일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정부보고서의 주장과 비교분석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간 연도의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의 비교도 가능해졌다. 또한 2004년 이전의 무역자유화 혹은 FTA 체결로 인한 세계적인 관세인하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중국경제의 부상, 생산네트워크의 국제화, 무역전환효과의 피해전략으로 여타국과의 연쇄적 FTA 체결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합당성은 FTA로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중·일 FTA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고 그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II. 한·중·일의 FTA 추진 현황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별주처	어기구 의원실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이선희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신인사 노무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일본 중소기업 R&D의 현주소와 한국 중소기업 비교 연구
	계약금액	일금 이백이십만원(₩2,200,000원)
	계약기간	2016. 10. 1. ~ 2016. 12. 15.
기타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9.

국회의원 어기구

[작성자 도소연 (성명) 

[별지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혁신의 담당자로서 중소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혁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데이터의 미비·부족을 때문에 계량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경영자원의 제약의 강한 중소기업이 이노베이션에 임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외부의 기관과 협력하고, 사외의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그러나, 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이나 산학연 협력의 실증연구는 지금까지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의 이노베이션이나 기업간 협력·산학연 협력에 관한 연구서는 많이 있지만, 필자가 아는 한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데이터와 관청 통계의 개표 데이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기업간 공동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의 실태를 밝히며, 기업 규모간·기술 분야간의 비교와 국제비교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그리고 기술협력에의 대처의 요인, 기술협력의 효과와 성공요인, 협력 상대의 탐색과 선택의 요인,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계량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10 . 1. ~ 2016. 12. 15.
- 연구자²⁾ : 신인사 노무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이선희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11. 22 ~ 2016. 12. 20
- 연구자²⁾ : 김진영 박사 (가톨릭대학교·한국재정법학회)

3. 주요 내용³⁾

- 먼저는 민간투자사업 일반론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법적근거와 연혁, 종류, 절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다음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개관하며 절차상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방안을 살펴본다.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익성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며 입법안을 제시한다.

[목차정리]

I. 들어가는 말

II. 민간투자사업 일반론

1. 민간투자제도의 의의와 법적근거
2.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방식
4. 민간투자제도의 명암과 한계

II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

1.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의 필요성
2. 민간투자사업 절차상의 공공성 확보방안

IV. 결론

* 별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SOC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2016.12.20.(화)

책임연구자 : 김진영 박사 (한국재정법학회)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필주처 계약자 계약 상대자	여기구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우태현 · 주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정부 정책광고의 정파적 성격과 규제방안
	계약 금액	일금 이백오십만원(₩ 2,500,000 원)
	계약 기간	2016. 10. 1. ~ 2016. 12. 12.
계약 내용	기타 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u> or <u>연구용역보고서</u> 1부, <u>용역결과물</u>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9.

국회의원 어 기 구



[작성자 도소연 (성명)]

[별지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2014년에서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이른바 ‘노동시장구조개선’ 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내용으로 전례없는 정책광고 및 정책선전을 지상파와 일간지 지면 뿐 아니라, 인터넷, 라디오, 각종 벽보 및 옥외광고 등에서 무차별 시행하고 있음
- 정책광고 및 선전은 정부의 국정방향, 또는 정책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을 상대로 이해와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인데, 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책들이 진실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정책광고 및 선전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와 관료의 ‘고도의 전략적 행위’로서 관료와 여당의 ‘정책의 공공성을 상실한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행위’이며, 특히 국가예산으로 유료로 미디어의 시간 또는 지면을 사서 광고의 형태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국민의 세금이 유용될 소지가 있는 행위임.
- 또한 민주적인 절차와 적절한 견제장치가 결여된 정부광고의 문제점은 여론의 조작을 통한 여론의 독점현상을 초래하거나, 반대여론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의 합리화 과정을 거쳐 신자유주의 혜계모니의 재생산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소지가 매우 높은 행위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정책의 생산과 결정과정, 그리고 정책홍보의 과정에 의회 또는 국민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본 보고서의 목적으로 함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10.1 ~ 12.12
- 연구자²⁾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3. 주요 내용³⁾

- 2014년과 2015년 지상파 및 종편에 방영되거나, 일간지 지면 광고 및 기사 등의 고용노동부 정책광고와 그 외 노동부의 인터넷, 라디오 및 옥외광고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달된 광고내용을 분석하고,
- 이들 광고 및 선전을 시행하기 위해 사전에 작성한 고용노동부의 광고기획안과, 광고기획사 발주계약 및 결산서 등을 분석함
- 그 외 해외 주요 국가의 정부의 정책광고와 관련한 규제법규 또는 관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 그간의 정부광고에 관한 정부의 규제법규 및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정책 시사점
 -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는 프랑스, 미국 특히 영국 정부광고의 특징은 정파적 선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정부광고는 시행절차 상 국회의 승인을 받게 하거나, 행정부가 관례상 자기 규제의 형태로 정파적 광고를 자제하거나. 또는 행정부 내부 규정을 두어 광고시행을 규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부광고에 대한 국회의 견제, 행정부 내의 자기 규제 등이 없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가예산을 들여, 국회에서 승인되지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않은 법률안, 또는 다툼의 소지는 물론 명백한 위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정부광고가 일정한 기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현재 관료와 여당이 '정책의 공공성을 상실한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예산남용 및 국회의 권위를 침해하여 3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고려될 수 있는 규제안은 다음과 같음
- 정부 정책광고는 시행 전 부처 소관 상임위에 광고의 내용, 방법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국회(상임위)의 직접적 규제가 비효율적이거나, 행정부의 정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으므로, 방송광고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가칭) 정부광고심의위원회 등 광고 사전에 광고의 정파성, 위법성, 국회의 고유권한 침해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광고내용, 방법, 예산 등을 심의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내용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이른바 유사정파적 광고의 경우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전제하에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정부 정책광고의 정파적 성격과 규제방안

2016. 12. 12. 우태현 연구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과 공기와 광고로 이루어져 있다.”(정병섭·리대룡, 2001)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014년에서 2015년 박근혜 정권은 이른바 ‘노동시장구조개선’ 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내용으로 전례없는 정책광고 및 정책선전을 지상파와 일간지 지면 뿐 아니라, 인터넷, 라디오, 각종 벽보 및 옥외광고 등에서 무차별 시행하고 있음
- 정책광고 및 선전은 정부의 국정방향, 또는 정책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을 상대로 이해와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인데, 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책들이 진실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정책광고 및 선전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와 관료의 ‘고도의 전략적 행위’로서 관료와 여당의 ‘정책의 공공성을 상실한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행위’이며, 특히 국가예산으로 유료로 미디어의 시간 또는 지면을 사서 광고의 형태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국민의 세금이 유용될 소지가 있는 행위임.
- 또한 민주적인 절차와 적절한 견제장치가 결여된 정부광고의 문제점은 여론의 조작을 통한 여론의 독점현상을 초래하거나, 반대여론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의 합리화 과정을 거쳐 신자유주의 혜택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소지가 매우 높은 행위인 것으로 판단됨

103

[별지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발주처	여기구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경성대학교 산학 협력단 · 대표자 : 제우성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 사업자등록번호 : 617-82-06453 · 법인등록번호 or 대표자주민번호 : 184371-0000989 · 사업장전화번호 : 051-663-5089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의 특성
	계약금액	일금 이백이십만원(₩2,200,000원)
계약기간		2016. 10. 1. ~ 2016. 12. 20.
계약내용	기타사항	<p>◆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2.

국회의원 여기구



[작성자 도 소연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한국은 1997년 IMF 외환금융위기(이하 “외환위기”) 이후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경험하였음. 외환위기가 지난 지 벌써 20여년이 다 되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경제사회구조 및 자본축적구조가 변화하였음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음. 무엇보다도 투자의 급격한 위축 및 저투자의 장기자 속에 따라 저성장기조가 분명해졌고 이러한 저성장은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역사적 구조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다 크게 느끼게 하였음
- 이것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회로는 다시 현재소비를 미래로 이연하는, 즉 저축증 대 및 과잉유동성에 따라 투기적 수요로 집중하게 하면서 현재소비를 줄이는 그리하여 저소비구조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다시 장기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형태로 이어졌음. 이에 따라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특히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고학력 대출자들의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면서 청년실업문제를 사회적 현안이 되도록 하였음
- 동시에 취약한 복지구조는 저성장기조의 장기자속 속에 급격한 중세가 어려운 사회적 여건 하에서 송파세모녀 자살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함께 끊임없이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도록 하였음. 세계 10위 국가에 걸맞지 않게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지표에서 거의 꼴지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에 내수부문의 위축 속에 대기업 위주의 극단적인 수출주도 경제는 그나마 한국경제의 베텁목 역할을 했으나 대규모 설비투자 위주의 수출구조는 국내부문의 낙수효과, 특히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수출과 내수부문간의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용역과제는 외환위기 이전의 자본축적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적 자본축적과정이 어떠해야 할지 되돌아보고

자 하였음. 과거의 고도성장기의 성장에너지 혹은 성장구조에 대한 이해야말로 새로운 사회경제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봄. 비록 제한적인 지면과 주제범위이긴 하지만 우리는 향후 우리나라 자본축적구조의 장점을 살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에 일정하게 기여할 것을 본 보고서의 목적으로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10.1. ~ 2016. 12. 20.
- 연구자 : 성명: 전용복(경제학박사)
소속: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직위: 부교수

3. 주요 내용

- 외환위기 이전의 자본축적과정의 특성을 이윤율 공식에 의해 살펴보았음. 이 정식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자본주의의 총체적 활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 분석결과 자본구성증가율과 이윤분배율은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자본구성증가율과 자본스톡증가율 간의 장기추이는 자본구성증가율과 이윤분배율 만큼 가파르진 않지만 역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이윤율과 이윤분배율과의 관계는 가파르게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이 윤율이 이윤분배율에 매우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 이를 외환위기 이전 시기를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10년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즉 중화학공업화가 왕성하게 추진되었던 1975-84, 그리고 3저 호황기가 포함된 외환위기 직전인 1984-1993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그리고 이어 외환위기가 포함된 1994-2002년을 살펴보았음

○ 정책 시사점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 흔히 지적되고 있듯이 왕성한 자본축적에 따른 자본구성의 고도화의 힘에 의해 이윤율의 하락이 관찰되고 있음. 이러한 이윤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도성장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신규투자에너지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윤율의 하락이 거의 정체상태에 있음에도 성장에너지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신규투자에너지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잠재성장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신규투자여력을 크게 확대하는 쪽에 정책적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함
-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윤율의 하락이 멈췄는데 이는 이윤분배율의 증가와 관련이 깊은 듯 보임. 실제 외환위기 이후 강도높게 진행된 노동시장개혁은 고용의 유연성과 함께 기업들의 수익성을 제고시켰으나 장기성장에 대한 기여는 오히려 떨어뜨린 측면이 있음. 따라서 변화된 경제구조 하에서 최근 크게 논의되었던 소득주도 성장론의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상관계수 분석에 따르면 이윤율과 자본구성간의 상관계수가 -0.8563으로 매우 강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됨. 한편, 이윤분배율간의 관계도 0.6331로서 매우 강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전 고도성장은 왕성한 자본축적에 의해 진행되어 왔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들의 수익성은 하락하지 않음에도 축적이 약화되는 구조변화의 가능성성이 엿보임. 실제 이는 기업들의 막대한 사내유보 보유와도 무관하지 않음. 게다가 이러한 수익성은 약화된 임금분배율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소득분배정책과 신규자본투자원천을 내수 구매력과 연결하여 구조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본점)

등록번호 : 617-82-06453

법인명(단체명) :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대 표 자 : 제우성

개업연월일 : 2005년 03월 04일 법인등록번호 : 184371-0000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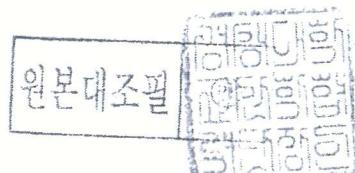
사업장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내)

본점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내)

사업의종류 : 업태 학교

종목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

발급사유 : 대표자변경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예()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6년 09월 05일

수영세무서장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161220-10000000-92901902				
공급자	등록 번호	617-82-06453	종사업장 번호		등록 번호	116-83-00045	종사업장 번호			
	상호 (법인명) 단	경성대학교 산학협력	성명	제우성	상호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박형준		
	사업장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경성대학교 내)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	학교	종목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이메일	hykim@ks.ac.kr			이메일	kesdcc01@naver.com				
	비고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16/12/20		2,000,000		200,000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2	20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의 특성						2,000,000	2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2,2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자본축적과정의 특성

전용복(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부교수)

제1절 서론

한국은 1997년 IMF 외환금융위기(이하 “외환위기”) 이후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경험하였다. 외환위기가 지난 지 벌써 20여년이 다 되어가면서 장기적으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경제사회구조 및 자본축적구조가 변화하였음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투자의 급격한 위축 및 저투자의 장기지속에 따라 저성장기조가 분명해졌고 이러한 저성장은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역사적 구조 속에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다 크게 느끼게 하였다.

이것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회로는 다시 현재소비를 미래로 이연하는, 즉 저축증대 및 과잉유동성에 따라 투기적 수요로 집중하게 하면서 현재소비를 줄이는 그리하여 저소비구조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다시 장기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형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특히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고학력 대졸자들의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면서 청년실업문제를 사회적 현안이 되도록 하였다.

동시에 취약한 복지구조는 저성장기조의 장기지속 속에 급격한 중세가 어려운 사회적 여건 하에서 송파세모녀 자살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함께 끊임없이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도록 하였다. 세계 10위 국가에 걸맞지 않게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지표에서 거의 꼴지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내수부문의 위축 속에 대기업 위주의 극단적인 수출주도 경제는 그나마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대규모 설비투자 위

(09)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제시

	발주처	엄용수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엘케이비스타 · 대표자 : 김종경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117-13-91279 · 대표자주민번호: · 사업장전화번호 : · H·P번호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현행 회계제도 관행과 개선에 대한 공인회계사 인식 조사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11. 15. ~ 2016. 12. 15.
계약내용	기타 사항	<p>◆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공인회계사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1부</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8.

국회의원 엄용수

[작성자 윤치업 (서명)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161216-10000000-92074521				
공급자	등록 번호	117-13-91279	종사업장 번호	등록 번호	116-83-00045	종사업장 번호		
	상호 (법인명)	엘케이비스타	성명	김종경	상호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우윤근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3, 1 동 7층 709호(여의도동, 포레스텔빌딩)		사업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업태	서비스	종목	기획,조사,인쇄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이메일	sky3525@nate.com		이메일	cheerup1004@hanmail.net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16/12/16	4,545,455		454,545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12	16	회계제도개선 연구용역				4,545,455	454.545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5,0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서를 확인할 때는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 제3자 발급서/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등록번호 : 117-13-91279

상호 : 엘케이비스타

성명 : 김종경

생년월일 : 1974년 09월 11일

개업연월일 : 2011년 11월 02일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3, 1동 7층 709호(여의도동,
포레스텔빌딩)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서비스

종목
인쇄, 기획
소프트웨어개발, 컨설팅

발급사유 :

공동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6년 10월 12일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MIS 국세청

연구용역보고서

1. 목적¹⁾

- 현행 회계제도 관행과 개선에 대한 공인회계사 인식 조사
- 분식회계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IMD) 회계투명성지수 평가에서 올해 61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
-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선 현장에서 외부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의 의견 수렴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11. 15 ~ 2016. 12. 15
- 연구자²⁾ : 엘케이비스타(대표 김종경)

3. 주요 내용³⁾

응답자 : 619명

- 2-30대(348명, 56.2%), 40대 이상(271명, 43.8%)
- 5년 이하(190명, 30.7%), 6-10년(133, 21.5%), 11-15년(124, 20.0%), 16년 이상(172, 27.8%)
- 대형법인(310명, 50.1%), 중형법인(120명, 19.4%), 소형법인(130명, 21.0%), 개인(59명, 9.5%)

현 회계제도 만족도

- 매우 불만족(315명, 50.9%), 약간 불만족(185명, 29.9%)

회계사들의 85.9%가 현행 회계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연령이 낮고 일한 기간이 짧을수록, 대형법인에 근무할수록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음.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현 회계제도 개선 필요성

- 매우 필요(543명, 87.7%), 약간 필요함(56명, 9.0%)
- ☞ 회계사들의 96.7%가 회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연령이 낮고 일한 기간이 짧을수록, 대형법인에 근무할수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분식회계 지속 이유

- 회사의 부실한 재무제표 작성(37.5%), 외부감사인의 형식적인 감사(17.1%), 독립성 훼손하는 자유수임제(15.7), 내부감사 장치의 부실한 작동(14.2%) 순으로 응답
- ☞ 연령이 높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회사의 부실한 재무제표 작성은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회계제도 개선 방향

- 분식 기업(39.1%), 분식에 연관된 임원(21.3%)에 대한 처벌 강화, 외부감사 품질 제고(14.7%), 지정감사제 확대(독립성 강화) 14.2% 순으로 응답
- ☞ 근무기간이 길고 개인사업자일수록 분식기업, 분식에 연관된 임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외부감사인의 품질 향상 방안

- 지정감사제도 강화(60.1), 감사보수의 현실화(29.6%)가 90%를 차지함.
- ☞ 일한 기간이 짧고 중소형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더 높은 응답을 보임.

지정감사제 강화 방안

-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지정감사제 (45.4%)
- 자유수임제도 개선 + 지정제도 확대 (33.1%)
- 순환방식의 지정감사제도(6년 자유수임+3년 지정제) (18.4%)

감사인의 경쟁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 감사관련 최저표준투입기준 마련 (69.8%)
-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강화(비감사영역 금지) (14.1%)

현행 회계제도 관행과 개선에 대한 공인회계사 인식 조사 보고서

(2016. 12)

[별지 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필주처 오세정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박재민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건국대학교 교수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 02-450-3589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박재민 • 은행명 : 우리은행
용역명	국가 과학기술의 선도형 패러다임 전환 전략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8. 21. ~ 2015. 9. 20.
계약 내용 기타 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 07 .

국회의원 오세정



[작성자 최민경 (서명)]



[별지 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 현행 과학기술정책은 여전히 추격형 전략에 기반하고 있어 조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바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과학기술의 선도형 패러다임 추진 전략을 검토하여 정리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8. 21. ~ 2015. 9. 20.
- 연구자²⁾ : 박재민(건국대학교, 교수)

3. 주요 내용³⁾

- 중장기적 정책 기조(일관성/지속성) 유지 및 추진방향, 정책 및 제도 일치가 필요하며, 정부 주도 R&D 지원방식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혁신 전략 제시
-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의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정부 국정목표 변경 등에 따라, 중점 투자 영역의 변동성 커지고 있어, 연구자 개인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가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그 조차 불안정한 체계 하에 있으며, 둘째, 이러한 단기적 연구수행 분위기는 기초기술과 인문학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등이 기반이 되는 창조경제, 융합의 시대에는 혁신역량 제약의 핵심적 원인으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셋째, 연구비의 규모를 제한하더라도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개선을 추진 필요

- 출연(연)의 경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둘째, 본래의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의 운영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셋째, 이를 위해 급성장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추진하고, 넷째, 보다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결과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연(연)의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의 관점에서는 첫째, 현재의 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 법령 등은 이전 시기의 과학기술분야 투자가 부족했던 시대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연구개발을 위주로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최근의 다양한 혁신활동을 진흥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둘째,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을 다양한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적 근간이 되도록 법령을 확대 개정하고, 연구개발활동과 타 혁신활동이 균형되게 반영되도록 추진하며, 또한 셋째, 정책 및 사업간 연계성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혁신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연구주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중장기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
- 민간부문 역량을 활용한 기업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여, 출연(연) 본연의 연구 임무에 충실한 운영, 출연(연)의 연구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방안 마련
- [전략 1] 과학기술 혁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전략 2] 중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 [전략 3]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정체성 및 기능 재정립과 산업역량 활용 강화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제시

- [전략 1]의 경우 주요과제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과제 1-1) 등 세 과제, [전략 2]의 경우 소액 장기 연구비제 도입(과제 2-1) 등 두 과제, [전략 3]의 경우 출연(연) 역할 재조정 및 성과평가 전면 재검토 등 다섯 과제 제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과학기술혁명

- 국가 과학기술의 선도형 패러다임 전환 전략 -

2016. 9. 26

- 박재민 건국대 교수 -

[별지 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약자	별주처	오신환 의원실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주)아시아리 서치앤컨설팅 · 대표자 : 허동원 · 주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 : 107-87-11702 · 법인등록번호 or 대표자주민번호: 110111-3944893 · 사업장전화번호 :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 · 은행명 :
계약 내용	용역명	개현 관련 국민여론조사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12. 1. ~ 2016. 12. 19.
	기타 사항	<p>◆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u> <u>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9.

국회의원 오신환



[작성자 최윤희]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07-87-11702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

대 표 자 : 허동원

개업연월일 : 2008년 08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3944893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10층 1014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II)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10층 1014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II)사업의 종류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태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종목	리서치
	소프트웨어개발
	연구용역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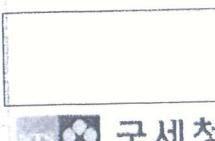
발급사유 : 정정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6년 09월 28일

금천세무서장



[별지 13]

개헌 관련 국민여론조사 개요

1. 목적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개헌(헌법 개정)에 대한 인식 및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함.

2. 주요 내역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ARS여론조사
- 표본크기 :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표집 1,0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구간, $\pm 3.1\%$ p
- 조사일자 : 2016년 12월 16일(금) : 1일간
- 조사기관 : (주)아시아리서치앤컨설팅
- 주요내용 : 헌법 개정 찬반 / 헌법 개정 범위 /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 / 헌법 개정 시기 / 헌법 개정 반대 이유 / 인구통계학적 특성(지역, 성, 연령)

3. 결과 및 방향

O 주요 결과

- 현행 헌법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현행 헌법의 개정에 대해서 찬성 한다는 응답이 62.3%(매우 찬성 39.7% + 찬성하는 편 22.6%)로 반대한다는 응답 37.7%(매우 반대 14.6% + 반대하는 편 23.1%) 보다 $+24.6\%$ 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찬성층은 남성(68.7%), 40대(72.3%) 연령층, 대전/세종/충청(84.3%), 광주/전라(83.7%) 지역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헌법개정 찬성층(N=623)에 현행 헌법 개정의 범위에 대한 응답으로 권리구조 개편 중심의 개정을 생각한다는 응답이 50.4%로 기본권 포함 전면적 개정(33.6%) 보다 $+16.8\%$ 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잘 모름 16.0%).

- 헌법개정 찬성층(N=623)에 현행 헌법의 개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응답으로 4년 중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원 내각제(16.5%), 이원 집정부제(14.8%) 순으로 나타남 (잘 모름 20.5%).
- 헌법개정 찬성층(N=623)에 헌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대통령 임기 내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58.6%로 차기 대통령 임기로 넘겨야 한다는 응답(36.7%) 보다 +21.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잘 모름 4.8%).
- 반면, 현행 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반대층(N=377)에게 반대하는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정치적으로 이용 당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81.2%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10.0%) 보다 +71.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잘 모름 8.8%).

O 정책 방향

- 조사 결과, 다수의 의견은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조속히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헌법 개정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헌법 개정 범위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을 지지하는 의견이 높으므로, 이는 이번 임기 내 개헌을 바라는 여론과 호응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와 관련된 개헌준비 절차가 필요함
- 다만, 개헌을 반대하는 여론도 38%에 달하며, 특히 반대 이유로 정치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회 내에서 개헌논의가 있더라도 반대측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99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161219-10000000-92743741				
공급자	등록 번호	107-87-11702	증사업장 번호	공급받는자	등록 번호	116-83-00045	증사업장 번호		
	상호 (법인명)	주식회사 아시아리서치 앤컨설팅	성명		허동원	상호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박형준
	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10층 1014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II)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			
	업태	서비스	종목		리서치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이메일	hmchae09@naver.com			이메일	cyh227@naver.com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16/12/19		4,545,455		454,545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12	19	개헌 관련 국민여론조사				4,545,455	454,545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5,0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HomeTax. 발급 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제3자 발급 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헌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16. 12.



100

[별지 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오 신 환 의원실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강남기 · 주소 :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 내용	용역명	복권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 (₩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10. 19. ~ 2016. 12. 18.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 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시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9.

국회의원 오 신 환



[작성자 최 윤 희]

[별지 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본 연구는 복권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현행 복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의 조사를 바탕으로 복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10. 19. ~ 2016. 12. 18.
- 연구자 : 강남기

3. 주요 내용

□ 복권위원회 독립 및 위상 강화

- 우리 복권산업의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해외수출 및 진출 활성화를 통한 복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복권위원회의 독립기관화하고 그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방안 등 고려

□ 민간기업 위탁기간의 장기화

- 복권산업은 공익기금 확충에 기여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산업이므로, 복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책임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대부분 공공법인 설립에 의해 운영하고 있음

-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현재의 5년 단위 사업자 선정방식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 위탁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영국, 호주가 이러한 민간기업 장기 위탁 운영체계를 따르고 있음

- 민간기업 장기 위탁 방안의 경우 장기독점 가능성 및 과열 경쟁이 문제가 된다면, 5년 단위의 단기 위탁 계약을 체결하되 5년마다 새로운 경쟁체제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 수탁사업자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신상품 개발 및 상품 다양화

- 복권 상품을 다양화하여 이용객의 니즈에 맞는 복권산업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복권의 유형을 추가하고, 전자복권 및 인쇄복권의 유형과 상품구조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복권의 과몰입이나 사행성 등 사회적 과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 논리가 존재하나,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복권은 타 사행산업에 비해 유병율이 낮고 도박 중독의 위험성도 약한 편임
 - 또한, 높은 수준의 기금적립율과 기금의 공익적 사용 등 복권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건대, 일정한 수준에서 복권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음
 - 가령,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권판매액 비중이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¹⁾

□ 인터넷판매 시스템 고도화

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94)에서 OECD 및 아시아(9개국)의 2003년~2011년(9년)의 복권매출 자료와 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권 수요를 결정하는 3가지 요인 중 각국마다 특성이 상이한 복권상품 자체의 특성에 따른 요소를 배제하고 복권구매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국민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규모, 소득수준, 인구구조, 경기변동 등 각종 지표를 변수로 하여 해당 국가의 예상복권 판매량을 추정하는 「1인당 복권판매액 결정모형」을 설정하여 도출한 결과, OECD 국가기준의 적정규모는 0.36%(2011년 OECD평균 0.43%)이며, 아시아 국가기준의 적정규모는 0.40%(2011년 아시아 평균 0.62%)로서 OECD와 아시아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0.38~0.39%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2013년 적정 복권매출 규모는 약 5조 5,000억 원이나 실제 매출은 GDP대비 0.3% 수준인 3조 2,34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반대 여론의 주요 논거는 사행성과 오프라인 판매점 매출 잠식으로 요약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영향 예측을 바탕으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인터넷판매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복권 인터넷판매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당첨자 보호, 이용자 관리 체계 고도화, 복권기금 확충, 유통비용 절감 등 다양한 순기능 요소도 존재함
 - 특히, 사행성 관련해서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구매한도 설정 등 시스템을 통한 사행성 관리가 용이하며, 전문화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전파력도 높아 오히려 사행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음
 - 판매점 피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판매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점의 매출은 일정부분 잠식될 것으로 보이나, 유통구조 간소화 및 수수료 절감을 통한 이익을 바탕으로 피해 판매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오랜기간 온라인복권의 해외 판매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사업자 등 대다수 기업에서 인터넷판매 비중이 10% 이하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국내 유사 사례인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도 2001년 오프라인 도입과 2004년 온라인 도입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인터넷판매 비중이 약 15%내외(연평균 12.5%)로 안정적 수준을 보이고 있음

최종보고서

복권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10-13

	발주처	우상호 의원실
계약자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군인권센터 • 대표자 : 임태훈 • 주소 : • 사업장전화번호 :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군인권센터 • 은행명 : KB국민은행
	용역명	군인권보호관제도에 관한 필요성 조사
	계약금액	일금 삼백만원(₩3,000,000원)
계약내용	계약기간	2016. 9. 01. ~ 2016. 9. 30.
	기타사항	<p>◆ 첨부서류 :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 <u>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u> (등록번호: 116-83-00045,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박형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p> <p>◆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10.05.

국회의원 우상호



[작성자 나서라 / 서명]

전자계산서				승인번호	20160930-10000000-44331754			
공급자	등록 번호	101-80-06648	종사업장 번호		등록 번호	116-83-00045	종사업장 번호	
	상호 (법인명)	군인권센터	성명	임태훈	상호 (법인명)	국회 사무처	성명	
	사업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2층(노고산동, 이한열 기념관)			사업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	비영리	종목	비영리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이메일	mhrk119@gmail.com			이메일	curio040@naver.com		
작성일자	공급가액				수정사유			
2016/09/30	3,000,000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09	30	연구용역				3,0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 101-80-06648

단체명 : 군인권센터

대표자 성명 : 임태훈

생년월일 : 1976년 07월 09일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12나길 26, 2층(노고산동, 이한열
기념관)

발급사유 : 정정

(유의사항)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07월 24일

마포세무서장



[별지 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군대 내 인권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외국
옴부즈만 사례 검토 및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향 연구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09
- 연 구 자²⁾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3. 주요 내용³⁾

- 서론: 대한민국에도 국방 옴부즈만이 필요합니다
- 옴부즈만이란?
- 국방 옴부즈만 제도 유형
- 사례연구: 독일의 국방 옴부즈만 운영
- 한국형 국방 옴부즈만, ‘군인권보호관’은 왜 필요할까요?
- 군인권보호관 논의 연혁
- 군인권보호관은 어디에 설치되어야 할까요?
- 결론: “제복입은 시민을 위하여”
: 20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합시다.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연구보고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입법 방향 연구

연구기관명 : 군인권센터

연구책임자 : 임태훈

연 구 원 : 김형남

2016. 9.

국회의원 우상호

65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10-11

	발주처	우상호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이남신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02-312-7488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이남신 · 은행명 : 우체국
계약내용	용역명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노동력의 전략적 대응방안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09.01. ~ 2016. 10.01
	기타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시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05.

국회의원 우상호 (인)

[작성자 나서라 서명]

10-11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의 전략적 대응방안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 들어가며

20대 총선이 예상을 깨고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자 말자 박근혜정부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구조조정 ‘반대’라는 성명서를 내야 할 야권에서 ‘조건부’라고 수식어를 붙이기는 하지만, 구조조정 ‘찬성’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근본적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고 말하면서, 사족으로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실업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말 조선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사양산업’인가? 어쩔 수 없이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 밖에 선택할 수 없는가? 사후처방식 실업대책이 마련되면 구조조정은 정당한 것인가? 고용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고용안정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원론적으로 말해서 산업생태계의 구조환경적 조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양산업과 한계기업을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좀비’사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에는 동의할 것이다. 대량해고와 같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채권자와 노사 모두의 공정한 비용분담을 사회협약으로 약속한다면 산업구조조정을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방만경영과 기업부실의 일차적 책임이 최고경영진에게 있다는 원론적 주장을 하진 않겠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는 항상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비용‘분담’을 어느 순간 노동자의 고통‘전담’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어서 살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해고를 막기 위해 ‘공정한’ 고통분담을 제기했던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과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를 겪고 난 후 우리사회에서 변한 과연 무엇인가?

기업부실의 주범이기에 구조조정의 1차 대상이 되어야 할 경영인과 사용자는 그 잘난 ‘법적’ 책임만 지면 끝이다. ‘대마불사’의 신화는 여전히 굳건하지만, 방만경영으로 몰락한 회장님의 재산이 환수되거나 그가 구속되었다는 소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빌주처	우상호 의원실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박명숙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가천대 유럽어문학과 강사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 031-750-5144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박명숙 · 은행명 : 우체국
계약내용	용역명	OECD LEED그룹의 지역고용창출과 경제발전 전략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09.01. ~ 2016. 10.01
	기타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u> <u>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06

국회의원 우상호

[작성자 나서라]

[별지 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적¹⁾

- 본 보고서는 지난 2014년 OECD가 발간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
- OECD의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연구 그룹은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10대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이에 걸맞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특히 지역차원의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의 상호시너지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례분석과 모범사례의 이식 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시사하는 바가 큼.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09~2016.10
- 연구자²⁾ : 박명숙(가천대 유럽어문학과 강사)

3. 주요 내용³⁾

- OECD LEED그룹의 지역고용창출과 경제발전전략
- 10대 정책의제 및 사례소개
-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OECD 국가의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전략

박명숙(가천대 유럽어문학과 강사)

1. 들어가며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연관관계를 찾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OECD가 발간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은 기존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보고서로 간주된다. OECD의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연구그룹의 핵심목표는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지역차원의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의 상호시너지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로 OECD는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다른 조건 하에서 높은 고용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경제모델을 주목해왔다. 이에 대한 사례분석과 모범사례의 이식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LEED그룹의 주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통합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목표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바와 같이, OECD LEED의 연구도 지역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과 일자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전국차원,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조합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OECD, 2014).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OECD LEED그룹은 지역 고용의 창출과 경제발전에 대한 10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 글은 OECD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 발췌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중요한 시사점과 함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12-13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우상호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홍일표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더미래연구소사무처장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고용현실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10.01. ~ 2016. 10.30
계약내용	기타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u> or <u>연구용역보고서</u> 1부, <u>용역결과물</u>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05

국회의원 우상호



[작성자 나서라 서명]

[별지 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적¹⁾

-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고용현실을 파악하여 이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서대문구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 건강안전문제, 그 외 고충을 노동인권 차원에서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
- 생활과 밀착된 공간(주거공동체)에서의 일반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인식하는 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10.1.~2016.10.30

- 연구자²⁾ : 홍일표(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겸임교수

3. 주요 내용³⁾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구성

II. 선행연구 검토

1. 경비노동자 관련 연구
2.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특성

III.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설문조사의 기본구성
2. 조사대상과 분석방법
3. 조사결과

IV.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방안 및 정책대안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고용현실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필주처	우상호 의원실
계약자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최지민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계약금액	일금 사백삼만칠천오백일백이십원(₩1,375,120원)
계약기간		2016. 10.01. ~ 2016. 10.31.
계약내용	기타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 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시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06

국회의원 우상호



[작성자 나서라]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은 2013년 12.2%이며 2030년경에는 24.3%, 2050년에는 37.4%으로 매우 급격한 증가세가 예상됨(통계청, 2013)
- 고령화는 경제성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산업구조 등 경제 분야의 다양한 측면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특히 국가재정에 관하여는 수입과 지출 양 측면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직관적으로 고령화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다차원·다각도로 이루어졌으리라 예상하기 쉽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이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하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 또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인 시·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기초지방정부 수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함
- 지금까지 수행된 고령화와 지방정부의 재정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수행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첫째, 지방정부 유형별 고령화 현황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 전통적 행정학 연구에서는 인구추계 변화에 착안한 정책제도 설계 등의 연계방향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함
 - 둘째, 광역지방정부에 국한되어있거나 일부 기초지방정부를 제한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인구 고령화가 실제 지방정부의 재정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셋째, 분석기간 동안의 인구자료에 기반을 한, 회고적 분석이기 때문에 향후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거의 모든 연구들이 2008년 이전 재정지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2008년 이후 고령화와 지방재정지출 간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기는 어려움

- 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부양, 복지제공 수단 선택과 재원 조달문제를 일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것은 기초지방정부이며, 이들을 분석단위로 삼아 인구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것이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
 - 노무현 정부 아래 67개 대규모의 국가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인구고령화 문제 대응의 주체로 부상함
 - 노인복지관련 예산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속시킴
 - 2015년 현재 노인복지예산(정부노인예산에서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총 지출규모)은 95년 노인복지관련예산 618억 원의 140.7배, 연평균 66%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 이에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년 10월 1일 ~ 2016년 10월 31일
- 연구자 :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책학 박사)

(연구자 이력)

- *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 취득 (2015년 8월)
- * 煎서울대학교 SSK단 사업(NRF- 2013-S1A3A -2043223 과제명: 고령사회와 노인문제)에 박사후 연구원
- * 現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의 선임연구원
- * 연구 분야는 고령사회의 효과 사회자본, 정부성과, 중앙-지방간 관계 등임
- * 대표연구로 사회자본이 노인문제감소에 미치는 효과분석(2016)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노인복지서비스 효율성 평가(2015),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유형과 정책적 시사점(2014) 등 논문과 저서가 있음

3. 주요 내용

1)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개관

- 고령화 연구에서 기초지방정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기초지방정부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 특히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령화 추계를 통해 고령화가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과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였음
 - 첫째, II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별(기준 시군구 구분 및 7개 정부 유형별 분석)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장래 인구를 직접 추계한 결과를 소개함
 - 둘째, III장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지출과 지방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환경이 달라졌음을 주지, 가장 최근에 수행된 인구고령화와 지방재정의 실증연구의 내용을 정리함. 이를 통해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확인함
 - 셋째, IV장에서는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2) 장별 주요 내용

(1) II 장의 주요 내용

- 227개 기초지방정부의 고령화현황과 2030년까지의 인구구조 추계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 중임
 - 1990년의 고령화율은 5.1%에서 2000년에는 그 수치가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 2012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11.7%의 고령화율을 보임

- 2012년 한국 전체는 아직 고령화사회의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부 농촌지역은 이미 고령사회(14% 이상) 또는 초고령사회(21% 이상)로 진입함

□ 특히 2030년 이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고령화는 일부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매우 빠르게 나타남

- 2030년 기준으로 광역지방정부의 고령화율은 23.1%를 보임
- 2030년의 경우, 227개 기초지방정부 중 85.4%에 해당하는 193개 기초지방정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임계지방정부가 대거 탄생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단지 순서의 문제일 뿐 여타의 지방정부 유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됨

※ “임계집락”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전체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5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위험집락”으로 정의함
- 2030년이 되면 59개의 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의 설치기준인 인구 2만 명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은 2012년 2개(울릉군, 영양군)에서 2030년 27개로 확대될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6호에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 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성장촉진지역(현재 70개 시·군)으로 고시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 인구 공동화, 인구 과소화 등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일본의 경우 일찍이 ‘한계집락’과 ‘위험집락’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수행한 뒤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일본은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지방소멸’을 야기하기 때문에 서둘러 내각에 중앙의 사령탑을 두고, 광역단위의 지방에도 ‘지방 사령탑’을 두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2) III장의 주요 내용

가. 선행연구 논의 정리

-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변화는 ①복지제도 차원과 ②재정건전성 차원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복지제도 차원: 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세대 간 갈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재정 부문 및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제시한 연구는 보편적 복지 기조에 따른 일률적 연금지원과 선별적 복지에 따른 소득 계층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재정건전성 차원: 고령화 사회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사회부담률, 저축률 그리고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크기를 밝히거나, 사회부담의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변화정도를 추정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과거 세입추이는 총괄적으로 자체재원 비중은 꾸준하게 하락한 반면, 이전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전재원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빠르게 증가함
- 고령화와 지방재정 충지출 간 관계에 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고령화가 지방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지방재정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음(하능식·임성일, 2007; 윤석완, 2010). 따라서 지방재정의 세출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큼

나. 실증분석결과

- 본 연구는 지방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적으로 밝혀진 주요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통제함
 - 고령화로 인해 각 기능별 재정지출이 받는 고유한 영향 유무와 그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함임

-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총 6년간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함

□ 고령화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령화는 총지출규모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임. 고령인구 1% 증가 시, 총지출은 기댓값에 비해 0.179% 증가함
- 일반행정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기초지방정부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경우 부(-)의 효과가 관찰됨. 노인인구규모가 1% 증가하면 일반행정비 지출규모는 기댓값에 비해 0.651% 감소함
- 사회개발비에 미치는 영향은, 기초지방정부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경우 노인 인구규모의 증가는 사회개발지출에 정(+)의 영향을 보임. 고령인구 1% 증가시, 총지출은 기댓값에 비해 0.807% 증가함
- 경제개발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노인인구규모가 1% 증가하면 전체 기초지방정부의 경제개발비 지출규모는 기댓값에 비해 1.356% 감소함

(3) IV장의 주요 내용

□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은□

□ 중앙과 지방 간 복지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아젠다 (agenda) 마련이 절실함

- 일례로 의무지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을 통한 중앙-지방간 책임부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자격요건·수혜혜택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법정사업은 지자체의 의사 반영 정도가 미미하고, 전국적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 사업들이므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원을 보장하여야 할 것임
- 무상보육사업·기초연금과 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시행되

고 있는 복지사업은 지방정부의 개입여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다한 재정부담은 부당함

□ 무엇보다 지방교부세제도의 본연의 성격 및 기능을 재확인하여 정립하는 것
이 필요함

-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대폭 확충을 통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규모는 점차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인 8대 2를 유지하면서,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의 부족재원을 계속 보전해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지방교부세의 기능 역시 부족재원의 보전과 지방정부 재정형평화 기능 중에서 자주재원을 통한 재정분권화가 이루어진다면 지방교부세 역시 재원 보장보다는 재정 형평화 기능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기초 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등 4개 항목의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반영비율을 현행 20%에서 자치단체의 수요증가 규모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에 신생아 또는 귀농 또는 귀촌 등 인구유입을 반영하는 사회적 인구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2015년 변경된 사회복지수요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중에서 ⑨아동복지비의 측정단위에 영유아 인구수(0~5세)를 추가하여, 신생아 등의 산아(産兒)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복지교부금의 도입방안(가칭)'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박경돈·이정희, 2010)

- 현재의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늘어나 제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지만, 지방의 복지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방의 사업수행에 따른 자율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재정지출규모와 지출행태에 미치는 효과분석

[별지11]

8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필주처	우원식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사)환경정의 · 대표자 : 김일중 · 주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 : 208-82-04038 · 법인등록번호 or 대표자주민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전화번호 :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근무실태 조사 연구(금액착오로 인한 추가신청)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4,500,000 지급완료, 500,000 추가지급)	
	계약기간	2015. 4. 10. ~ 2016. 4. 10.	
기타 사항	<p>◆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과물 각 1부)</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8 . 4 .

국회의원 우원식
[작성자 김유림]



[별지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이고 높은 강도로 노출되어 있는 집단을 미세먼지 취약군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취약 직업군인 환경미화원과 교통경찰, 툴게이트 수납원, 지하철 노동자 등은 직업 특성으로 인해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장시간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장시간 노출에 따른 노동자들의 건강 영향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명확한 근무지침은 없다. 또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과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직업군의 근무지침에 대한 법적, 제도적 마련을 통해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5. 4. 10. ~ 2016. 4. 10.
- 연구자²⁾ : 이경석(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팀장)
심송학(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간사)

3. 주요 내용³⁾

-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근무환경 농도 측정조사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농도 측정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취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약 직업군의 근무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 직업군의 미세먼지 노출을 수치화하는 측정조사 진행.

측정 대상 장소는 교차로와 지하철, 지하상가 각 20개소와 툴게이트(고속도로) 4개소 총 64개소로 하고, 취약 직업군 근무환경 초미세먼지(PM2.5)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농도조사를 시행.

-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지침 및 정책을 확인하여 근무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노출 근무환경과 인체영향의 상관관계를 확인.

설문대상으로 서울지역 일반 만 20세 이상 미세먼지 취약직업군 229명을 선정하여 실시. (택시기사, 버스기사, 툴게이트 수납원, 지하철 근무자)

- 취약직업군 미세먼지 관리 방안조사

국내외 대기질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미세먼지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취약직업군의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건강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 조사 진행함.

조사방법은 문헌 조사로 실내외 공기질 관리기준 조사와 국내외 미세먼지 관리 현황 비교, 취약 직업군 미세먼지 노출 관리 대안 조사를 대상으로 함.

- 조사 결과

툴게이트와 교차로 등 실외 노동자들은 환경부 초미세먼지 주의보 “나쁨” 수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교차로 20개소의 측정 결과 평균 PM2.5의 농도는 $73.6\mu\text{g}/\text{m}^3$ 로 나쁨 수준, 고속도로 툴게이트 10개소 측정 평균도 $79.9\mu\text{g}/\text{m}^3$ 로 나쁨 수준.

툴게이트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측정 평균도 $549\mu\text{g}/\text{m}^3$ 로 실내 대기질 유지기준이나 사무실 공질질 지침 $500\mu\text{g}/\text{m}^3$ 을 넘어 실제 근무 환

경이 열악하며 이를 노동자들도 느끼고 있음.

지하상가의 경우는 PM2.5의 측정 평균은 가장 낮았으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측정 평균은 $636\mu\text{g}/\text{m}^3$ 을 나타내며 가장 높은 수준. 환기 방법이나 수준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제거에 효율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노동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호흡기계 질환과 피부계 질환이 각각 36.08%, 34.54%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178명의 응답자 가운데 50%(89명)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화에 동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톨게이트노동자, 택시, 버스, 트럭운전자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이 우선 실시되어야하며, 환경부 실내대기질관리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권고 기준 위반 관련해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또한 이를 통해 노동자의 피해현실을 감안한 초미세먼지(PM2.5) 기준에 대한 설정이 필요.

실제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이나 노동부의 사무실 공기질 관리지침의 경우 권고 형식의 관리 방식이 강하여 의무 부여가 약함. 특히 사무실 공기질의 경우 실제 조사나 관리 현황 파악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정도의 의무가 부여되어야함.

단순한 마스크 등 보조기구 제공을 벗어나 연장 근무 자체, 휴식 제공, 근무시간 조절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조정을 고민해야하며,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예경보발령시 또는 미세먼지/오존/통합대기환경지수에 따라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할 것.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160428-10000000-51712040			
공급자	등록번호	208-82-04038	총사업장번호	등록번호	116-83-00045	총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사)환경정의	성명	상호(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성산동)		사업장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업태	서비스	종목	업태	부동산	종목	
	이메일	조사연구		이메일	임대 greenvote@hanmail.net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비고			
2016-04-28	4,545,454	454,546	기재 사항 착오정정	당초 승인번호 (20160428-10000000-48073451)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4 28	미세먼지취약직업군근무실태조사연 구				4,545,454	454,546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5,000,000							

본 인쇄물을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서를 확인하실 때는 홈페이지(세금)계산서 제3자 발급서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454,546 ₩ 454,546

[별지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발주처	우원식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대표자 : 임상혁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68-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2-04594 · 법인등록번호 : 110122-0026708 · 사업장전화번호 : 02-490-2097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 내용	용역명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계약 금액	일금 삼백만원(₩ 3,000,000원)
	계약 기간	2016. 7. 10. ~ 2016. 9. 30.
	기타 사항	<p>◆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국회의원 우원식: 일반수용비 - 1,500,000

국회의원 김민기: 일반수용비 - 1,500,000

2016. 11 . 3 .

국회의원 우 원 식

국회의원 김 민 기

[작성자 김 유 림 (서평)]



전자계산서				승인번호	20161102-10000000-64071543		
등록 번호	132-82-04594	종사업장 번호		등록 번호	116-83-00045	종사업장 번호	
상호 (법인명)	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 건강연구소	성명	임상혁	상호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박형준
공급자 사업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가정로49길 53(면목 동)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공급받는 자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업태	서비스	종목	학술연구	이메일	milla212@naver.com		
이메일	pej7059@gmail.com			이메일	psm01289@hanmail.net		
작성일자	공급가액				수정사유		
2016/11/02	3,000,000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11 02	초등학교 교육환경조사		1	3,000,000	3,0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합 3,0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협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살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 세금계산서>제3자 발급 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면세법인사업자:지점)

등록번호 : 132-82-04594

법인명(단체명) : 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대 표 자 : 임상혁

개업년월일 : 2009년 01월 02일 법인등록번호 : 110122-0026708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68-1

본점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76-10 성림상가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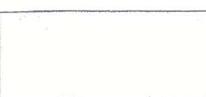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학술연구

교부사유 :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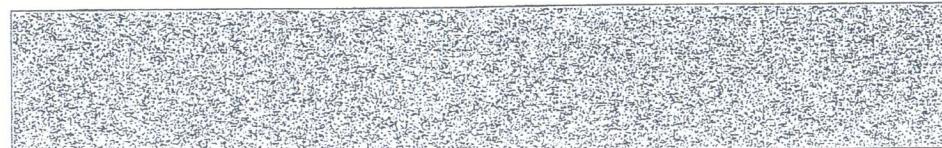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부(✓)

2010년 04월 22일

동대문 세무서장



국세청



[별지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적¹⁾

초등학교 교육환경과 학습교구의 유해물질 현황을 파악하여 어린이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함.

- 서울 소재 4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유해금속 조사(마감재/가구/학습교구 등)
- 서울 소재 4개 초등학교의 체육관 먼지에서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분석
- 체육용품과 학습교구의 환경호르몬 분석(35개 제품의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년 7월 ~ 9월

- 연구자²⁾ :

최인자(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분석팀장)

오윤희(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분석팀 연구원)

정수지(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분석팀 연구원)

박수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고금숙(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3. 주요 내용³⁾

이번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각종 체육교구 및 학습교구 중심으로 납, 카드뮴 등의 유해금속과 프탈레이트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체육교구가 사용되는 학교 체육관에서 먼지를 채취하여 납, 카드뮴 그리고 프탈레이트의 오염수준을 확인하였다.

총 35개 조사대상제품 중 ‘안전’ 한 제품은 9개(25.7%), ‘주의’ 가 필요한 제품은 2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개(5.7%) 그리고 ‘위험’ 한 제품은 24개(68.6%)가 확인되어, 납이나 카드뮴 그리고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이상 들어 있는 제품이 다량 발견되었다.

체육교구로는 농구공, 배구공, 야구글러브, 줄넘기, 계주용 바톤 등 체육활동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었는데, 줄넘기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대부분 PVC 재질이며 납이 고농도로 발견되었고, DEHP, DINP 등과 같은 프탈레이트가 최대 31.27%까지 발견되었다. 줄넘기는 2015년 6월 4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자율안전확인제품으로 적용되면서 프탈레이트와 납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학습교구는 커팅매트, 각종 탈, 바둑알 및 장기알 등을 조사하였는데, 커팅매트와 탈에서는 0.1% 이상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고, 바둑알과 장기알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납이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대상제품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외대상이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나 규제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었으며, 시급히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체육관 먼지를 채취하여 납, 카드뮴 그리고 프탈레이트 오염 수준을 확인한 결과, 납은 108~387mg/kg, 카드뮴은 1.7~13.9mg/kg 그리고 총 프탈레이트 농도는 1271.4~7778.1mg/kg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오염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성을 확인하는 것을 어려웠으나, 체육관 내장재 그리고 각종 체육교구 중에서 발견되는 물질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보고서 목차]

1. 조사대상
 - 1.1 어린이 제품 1.2 먼지 시료
2. 조사방법
 - 2.1 유해원소 2.2 프탈레이트 2.3 평가방법
3. 결과
 - 3.1 PVC 여부
 - 3.2 납 & 카드뮴
 - (1) 체육교구 (2) 학습교구
 - 3.3 프탈레이트
 - 3.4 제품의 유해성 평가
 - 3.5 먼지 중 납 & 카드뮴
 - 3.6 먼지 중 프탈레이트
4. 결론 및 제언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교 유해물질 실태보고

조사기관 :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분석기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69)

[별지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발주처	위성곤 의원실
계약자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 대표자 : 고병수 • 주소 : 제주시 연삼로 399 3층 • 사업자등록번호 : 616-82-21242 • 법인등록번호 : 220121-0004068 • 사업장전화번호 : 064-757-4843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와 새로운 제주비전
	계약금액	2,700,000
	계약기간	2016년 10 월 16 일 ~ 2016년 12 월 16 일
	기타사항	<p>◆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 20 .

국회의원 위성곤



[작성자 진현아 (전병우)]

[별지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시선으로 본 평가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방향성을 진단해 봄.
-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해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제주미래 비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통해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년 10 월 16 일 ~ 2016년 12 월 16 일
- 연구자 :

강봉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원장/제주대학교 교수

김민영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제주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평선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제주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



3. 주요 내용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1. 제주특별자치도 10년 개괄
2. 시민사회단체의 10년 평가

1> 총괄 및 자치분야 평가

2> 개발, 환경분야 평가

3> 농업분야 평가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

1. 시민사회단체의 특별법 제도개선 방향

2. 2016년 총선 등을 통한 특별법 개선 방향

제3장 제주다움을 위한 새로운 제주비전

1. 제주다움을 위한 새로운 제주비전



전자계산서				승인번호	20161220-10000000-93093167				
공급자	등록 번호	616-82-21242	종사업장 번호	공급받는자	등록 번호	116-83-00045	종사업장 번호		
	상호 (법인명)	(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성명		고병수	상호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박형준
	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9, 4층(이도이동)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			
	업태	종목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이메일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수정사유				
2016/12/20	2,700,000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12	20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와 새로운 제주비전						2,7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2,7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 616-82-21242

단체명 : (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대표자 성명 : 고병수 법인등록번호 : 220121-0004068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9, 4층(이도이동)

발급사유 : 사업장 정정

(유의사항)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08월 07일

제주세무서장



국세청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와 새로운 제주비전

-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중심으로 -

2016년 12월



10-25

[별지 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유민봉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정수현 ·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위: 명지대학교 미래정치 연구소 전임연구원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H·P번호: · 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은행명:
계약내용	용역명	미국, 프랑스, 독일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특징에 대한 용역 보고서
	계약금액	일금 이백만원(₩2,000,000원)
	계약기간	2016.8.29 ~ 2016.9.20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 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24.

국회의원 유민봉

[작성자: 유무경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우리나라 1948년 제정헌법 아래 9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 해왔음
 - 개헌은 국가의 지도체제 전반을 고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우리의 정치적 현실에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정치조직과 제도가 서로 다른 대표적인 나라들인 미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권력구조와 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또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정부가 서로의 권한과 역할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음

2. 계약내용

- 계약기간 : 2016.8.29. ~ 9.20.
- 연 구 자 : 정수현 박사(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
최 선 박사(연세대 정치학과 BK21 플러스사업단)
정하윤 박사(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3. 주요내용

- 서론
- 미국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 프랑스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 독일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 결론

미국, 프랑스, 독일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특징:
제도의 형성과정과 의회와 정부 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 수 현 (명지대학교)
최 선 (연세대학교)
정 하 윤 (배재대학교)

[별지 12]

10-26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유민봉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탁종연 ·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위: 한남대학교 부교수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H·P번호: · 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은행명:
계약내용	용역명	공식범죄 통계에 대한 용역 보고서
	계약 금액	일금 일백만원(₩1,000,000원)
	계약 기간	2016. 9. 1 ~ 2016. 9. 23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 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후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24.

국회의원 유민봉



[작성자: 유무경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는 1963년 일본의 경찰 통계를 모태로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 점들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리나라 공식범죄에 대한 개혁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그리고 범죄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계약내용

- 계약기간 : 2016.9.1. ~ 9.23.
- 연구자 : 탁종연 교수(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 주요내용

- 공식범죄통계의 의의
- 공식범죄통계에 드러난 한국의 범죄
- 공식범죄통계 품질평가
- 공식범죄통계의 개혁
- 공식범죄통계의 남은 개선방안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개선방안*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탁종연

*이 보고서는 저자가 저술하고 있는 책의 일부를 각색한 것으로서, 유민봉의원실의 의정활동 참고용으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100

[별지 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인 경우)

	발주처	유민봉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주)마크로밀эм브레인 · 대표자: 최인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역삼동, 837타워 10~14F)
	용역명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인식 조사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내용	계약기간	2016. 12. 1. ~ 2016. 12. 22.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 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 116-83-00045,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우윤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 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3.

국회의원 유민봉



[작성자 : 유무경

[별지 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함

2. 계약내용

- 계약기간 : 2016. 12. 1. ~ 2016. 12. 22.
- 연 구 자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3. 주요내용

- 한국사회와 한국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의식
- 한국사회와 한국사람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현상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05-81-98720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

대 표 자 : 최인수

개업년월일 : 1999년 04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1670234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 (역삼동, 837타워 10~13층)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 (역삼동, 837타워 10~13층)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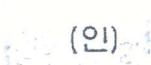
종목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업
사이버쇼핑
학술연구용역
리서치및컨설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온라인광고

교부사유 : 정정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주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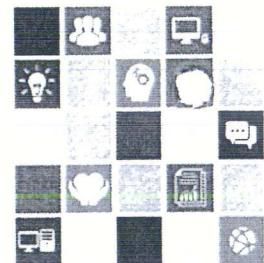
2012년 08월 07일 

역삼세무서장 



국세청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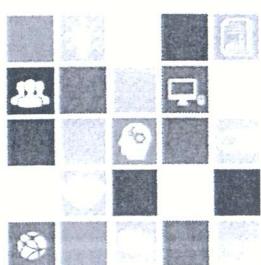


Date 23, December, 2016

Prepared for : 호서대학교

CONTENTS

1. 응답자 특성
2. 한국사회와 한국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의식
3. 한국사회와 한국사람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현상



12-53

[별지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발주처	유성엽 의원실
계약자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휴먼리서치 · 대표자 : 함효건 · 주소 : · 사업장전화번호 :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입법연구를 위한 정책수요조사 보고서
	계약금액	일금 사백구십오만원(₩4,950,000원)
	계약기간	2016. 12. 16. ~ 2016. 12. 17.
계약내용	기타사항	<p>◆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0.

국회의원 유성엽



[작성자 안세은 (서명)]

입법연구를 위한 정책수요여론조사 개요

1. 목 적¹⁾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국정교과서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인하고 입법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역

- 조사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성인 남·여
- 조사방법 : 휴대전화 임의번호 생성을 통한 전화자동응답
- 표본크기 : 2,027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 2.2%
- 조사일자 : 2016년 12월 16일~17일
- 조사기관 : 휴먼리서치
- 주요내용²⁾ : 개헌논의에 대한 견해, 국정교과서 관련 견해, 누리과정 및 ‘유아공 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 개정에 대한 견해

3. 결과 및 방향³⁾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누리과정(어린이집)의 예산 또한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이를 입법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여론조사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

2) 여론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3)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출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 방향 등을 제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161219-10000000-92516515			
공급자	등록 번호	130-40-85932	종사업장 번호		등록 번호	116-83-00045	종사업장 번호		
	상호 (법인명)	휴먼리서치	성명	함효건	상호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우윤근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1, 803 호(여의도동, 할렐루야종회빌딩)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업태	서비스	종목	여론조사, 시장조사, 선거컨설팅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이메일	vivahuman@gmail.com			이메일	ksr0719@hanmail.net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16/12/19		4,500,000	450,000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2	19	입법연구 정책수요조사				4,500,000	45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4,950,000									

 본 인쇄물을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살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등록번호 : 130-40-85932

상 호 : 휴먼리서치

성 명 : 함효건 생년월일 : 1970년 09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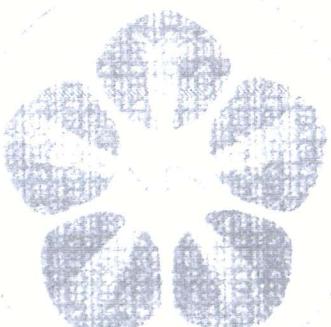
개업연월일 : 2009년 09월 10일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1, 803호(여의도동, 할렐루야총회빌딩)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서비스

종목 여론조사, 시장조사, 선거컨설팅
 광고, 홍보기획, 솔루션개발, 판매

발급사유 : 정정
공동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6년 09월 13일

영등포세무서장



임법연구를 위한 정책수요조사 보고서

2016년 12월 19일



[별지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05

계약자	별주처	유성엽 의원실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주)사루애드 · 대표자 : 석수경 · 주소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109-86-51926 · 법인등록번호 or 대표사무민번호 : 110111-5553535 · 사업장전화번호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입법연구 및 정책수요 조사 여론조사(정읍)
	계약금액	일금 삼백삼십만원(₩3,300,000원)
	계약기간	2016. 12. 17. ~ 2016. 12. 18.
	기타사항	<p>◆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문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u> <u>결과물 각 1부)</u></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0.

국회의원 유성엽



[작성자 안세은 (서명)]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승인번호 일련번호	2016121941000009a000003w									
공 급 자	등록번호	109-86-51926	종사 업장	공 급 받 는 자	등록번호	116-83-00045	종사 업자							
	상호 (법인명)	(주)자루애드	성명		석수경	상호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우윤근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511호			사업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1								
	업태	서비스	송복		연구개발입	업태		종목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년	월	일	공란수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2016	12	19	4			3	0	0	0	0	0	0	0	0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2	19	정책개발 여론조사(징급)						3,000,000	3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위 금액을 청구함					
3,300,000														

본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미전송건으로 국세청 전송이 완료된 이후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수신자 이메일: ksr0719@daum.net

입법연구를 위한 정책여론조사 개요

1. 목 적 다음 법률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연구조사

- 대한민국 헌법
- 국정역사교과서 사용중단에 관한 법률안
- 누리과정을 위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제정)법률안

2. 주요 내역

- 조사대상 : 전라북도 정읍시 19세 이상 남여
- 조사방법 : 자동전화면접조사 (유선전화 100%,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
- 표본크기 : 1,000개
- 표본오차 : 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 조사일자 : 2016년 12월 17일~18일 (양일간)
- 조사기관 : (주)자루애드
- 주요내용 :
 1. 개헌추진에 관한 찬반 여부
 2. 국정역사교과서 찬반 여부
 3. 국정역사교과서 문제 해결 방안
 4. 누리과정 관련 인식 여부
 5. 누리과정 예산 부담 방안

3. 결과 및 방향

헌법개정	시기상조 54.9% > 개헌적절 32.8% / 잘모름 12.3%
개헌은 국민투표 사안이므로 국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함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68.2% > 국정·검정 혼용 14.1% > 폐기반대 3.5%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	
누리과정	모두 내국세 32.1% > 유치원 교육생어린이집 내국세 27.6% > 모두 교육세 20.5%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세에 국한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므로 이를 반영	

※ 보고서 별첨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 jaruad@jaruad.kr
tel : 02-784-4979 / fax : 02-783-4979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09-86-51926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자루애드

대표자 : 석수경

개업연월일 : 2014년 11월 06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5553535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511호(여의도동, 대하빌딩)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511호(여의도동, 대하빌딩)

사업의 종류 : 업태 서비스
 출판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종목 광고업
 출판기획 및 도서출판, 인쇄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홍보대행업

발급사유 : 정정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jaruad1@hometax.go.kr

2015년 10월 28일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국회의원 유성엽 귀중

입법연구 및 정책수요 조사

여론조사 보고서

※ 정읍
편

JARU
자루애드

[별지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발주처	유성엽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주)자루애드 · 대표자 : 석수경 · 주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 : 109-86-51926 · 법인등록번호 or 대표자주민번호: 110111-5553535 · 사업장전화번호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입법연구 및 정책수요 조사 여론조사(고창)
	계약 금액	일금 삼백삼십만원(₩3,300,000원)
계약 기간		2016. 12. 17. ~ 2016. 12. 18.
계약 내용	기타 사항	<p>◆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0.

국회의원 유성엽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승인번호 일련번호	2016121941000009a000003t								
공 급 자	등록번호	109-86-51926	종사 업장	 받는 자	등록번호	116-83-00045	종사 업장								
	상호 (법인명)	(주)자루애드	성명		석수경	상호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우윤근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여의도동, 대하빌딩) 511호			사업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1									
	업태	서비스	종목		연구개발업	업태		종목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년	월	일	공란수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2016	12	19	4			3	0	0	0	0	0		3	0	0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2	19	정책개발 여론조사(고창)						3,000,000			3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위 금액을 청구함						
3,300,000															

본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미전송건으로 국세청 전송이 완료된 이후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수신자 이메일: ksr0719@daum.net

입법연구를 위한 정책여론조사 개요

1. 목 적 다음 법률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연구조사

- 대한민국 헌법
- 국정역사교과서 사용중단에 관한 법률안
- 누리과정을 위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

2. 주요 내역

- 조사대상 :	전라북도 고창군 19세 이상 남여
- 조사방법 :	자동전화면접조사 (유선전화 100%,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
- 표본크기 :	1,000개
- 표본오차 :	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 조사일자 :	2016년 12월 17일~18일 (양일간)
- 조사기관 :	(주)자루애드
- 주요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개헌추진에 관한 찬반 여부2. 국정역사교과서 찬반 여부3. 국정역사교과서 문제 해결 방안4. 누리과정 관련 인식 여부5. 누리과정 예산 부담 방안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에 담아야 할 내용

3. 결과 및 방향

헌법개정	시기상조 50.7% > 개헌적절 37.6% / 잘모름 11.7%
개헌은 국민투표 사안이므로 국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함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62.0% > 국정·검정 혼용 17.9% > 폐기반대 6.4%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	
누리과정	모두 내국세 37.5% > 유치원 교육생어린이집 내국세 22.4% > 모두 교육세 20.0%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세에 국한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므로 이를 반영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행정구역이 겹치는 경우 관할별 지역위원회 설치 26.5% > 모두 포함 25.9% > 심의 후 산자부 장관이 피해지역 지정 19.5% > 민간환경기구 설치 9.7%
관할 행정구역별 지역위원회 및 민간환경기구 설치를 포함하여 입법 추진	

※ 보고서 별첨



국회의원 유성엽 귀중

입법 연구 및 정책수요 조사

여론조사 보고서

※ 고창
편

JARU
자루애드

12-01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유성엽 의원실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최광웅 · 주소 :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데이터정치연구소 대표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프랑스 공공부문개혁 전개과정과 교훈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11. 1. ~ 2016. 11. 30.
	기타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 역 결과물 각 1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0.

국회의원 유성엽



[작성자 안세은 (서명)]

[별지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공공부문개혁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과 함께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하는 주요 개혁과제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10개월 동안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했으나 진전은커녕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공공부문 팽창으로 인해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데이터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2017년 출범할 신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제의 교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년 11월 1일 ~ 30일
- 연구자²⁾ : 데이터정치연구소 대표 최광웅

3. 주요 내용³⁾

사르코지 정부와 올랑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 비교

-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공공부문 총지출
- 공공부문 인건비 지출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프랑스 공공부문개혁 전개과정과 교훈

연구기간 : 2016년 11월 1일~30일

연구방법 : 프랑스국립통계청 및
OECD 관련자료 조사 분석

연구자 :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 대표

2016년 12월 19일

04

[별지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유성엽 의원실
계약 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배동수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세계사이버대학 총장보좌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 내용	용역명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계약 금액	일금 이백이십만원(₩2,200,000원)
	계약 기간	2016. 10. 1. ~ 2016. 10. 31.
기타 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시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0.

국회의원 유성엽



[작성자 안세은 (서명) 12]

[별지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²⁾

- 해마다 반복되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10.1. ~ 2016.10.31.
- 연 구 자¹³⁾ : 배동수 세계사이버대학 총장보좌

3. 주요 내용¹⁴⁾

- I . 들어가며
- II . 예산 확정 과정
 1. 예산 작성 절차
 2.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
- III . 국회의원 1년일정을 통해 본 ‘예산심사 부실의 이유’
- IV . 예산안 심사 제도의 문제점
 1. 촉박한 물리적 시한
 2. 결산 및 국정감사와 연계되지 않는 예산안
 3. 예산안 연구 분석 인력의 부족
 4. 의사일정합의의 원칙과 ‘국회선진화법’
 5.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 척도 부재
- V . 결론 -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제안

12)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3)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14)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작성자: 배동수

[별지 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유승민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북핵 논의 27년 평가와 전망
계약내용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9. 1. ~ 2016. 12. 30.
	기타 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 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주민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 .

국회의원 유승민



이지연

연구용역보고서

1. 목적¹⁾

북핵문제를 둘러싼 지난 27년간의 남북대화와 북미협상, 6자회담은 진전과 후퇴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5차 핵실험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중국의 **對北** 정책 향방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9. 1. ~ 2016. 12. 30.
- 연구자²⁾ :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 주요 내용³⁾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난 2016년 1월 6일 있었던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단행되었으며, 강도는 히로시마 원폭 수준에 버금가는 역대 최대급으로 전해진다. 특히, 북한은 이번 실험을 계기로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성공하여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 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제재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대내적으로는 9월 9일 정권수립일을 맞아 체제 결속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의도가 통하지 않는다면 향후 6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 등이 강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 핵실험 이후 UN 차원에서는 수차례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對北** 제재를 실행한 바 있다.⁴⁾ 번에서도 역시 UN은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하여 유엔 회원국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對北** 제재안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광물수출 금지에 대한 예외조항(민생항목) 삭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규제는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에 관한 내용들이 핵심이지만, 중국의 미온적 반응으로 안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보리 결의 채택 소요 기간의 장기화는 물론 결의 후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기대와 달리 중국은 북핵 불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체재 붕괴를 초래할 정도의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3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에도 미중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 하에 對北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며, 북핵문제 협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對北 제재의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미국은 향후에도 이러한 對北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북핵문제의 '비군사적 해결'을 전제로 하니, 대화보다는 제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한미일 3자 공조 하에 중국을 이용한 對北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압박('전략적 인내')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북한과 대화는 하겠지만, 변화가 없을 경우 직접 타격도 고려한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현재로서는 미국의 對北 강경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7

복핵 논의 27년 평가와 전망

2016. 12.

이 해 정

27

115

[별지 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빌주처	유승민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이해정 ·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 · P 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AIIIB를 활용한 북한 인프라 개발 방향
계약내용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9. 1. ~ 2016. 11. 20.
	기타 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 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u> or <u>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주민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 .

국회의원 유승민

김동희



[별지 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유승민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조동호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평가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9.30. ~ 2016. 11. 20.
	기타 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 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사례금의 4% 주민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1 . .

국회의원

유승민

김동희



연구용역보고서

1. 목적¹⁾

- 최근 국제사회는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경제제재를 활용한 갈등해결이 선호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한편 1950년부터 미국은 북한의 공산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으며, 1990년 대 이후에는 북한의 핵보유 의혹과 관련하여 다수의 제재를 부과함.
- 향후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9.30. ~ 2016. 11. 20.
- 연구자²⁾ :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3. 주요 내용³⁾

- 북한은 지난 3월 유엔 결의안 2270호에 의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재차 결정됨.
 - 제재안은 전례 없이 강력한 사안들을 담고 있었음.
- 한편 2016년 8월 21일 기준으로 44개 유엔 회원국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이행보고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서가 공개됨.

- 권고대로 6월 2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8개에 불과함.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아주 초기 단계의 제재 이행을 보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련 부처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수준임.
- 다만,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 방법과 독자제재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음.

□ 기본적으로 북한의 무역구조는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경제적 단절에 따른 피해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낮음.

- 더구나 인도주의적 목적 및 민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제재 적용 애매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경험을 통한 대비책으로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가능성이 있음.

□ 결국, 제재 이행이 본격화되더라도 제재의 경제적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요약

- 최근 국제사회는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경제제재를 활용한 갈등해결이 선호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북한은 정권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이었음.
 - 1950년부터 미국은 북한의 공산정권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핵보유 의혹과 관련하여 다수의 제재를 부과함.
- 그런데 대부분의 제재는 그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일반적으로 특정 행위는 효과가 높을 경우 반복되는데, 경제제재의 경우 효과가 없더라고 지속적으로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지난 3월 유엔 결의안 2270호에 의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재차 결정됨.
 - 제재안은 전례 없이 강력한 사안들을 담고 있었음.
- 한편 2016년 8월 21일 기준으로 44개 유엔 회원국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이행보고서가 공개됨.
 - 권고대로 6월 2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8개에 불과함.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아주 초기 단계의 제재 이행을 보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련 부처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수준임.
 - 다만,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 방법과 독자제재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음.
- 기본적으로 북한의 무역구조는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경제적 단절에 따른 피해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낮음.
 - 더구나 인도주의적 목적 및 민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제재 적용 애매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경험을 통한 대비책으로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가능성이 있음.
- 결국, 제재 이행이 본격화되더라도 제재의 경제적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평가

2016. 11.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별지 12]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H · 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북한의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사업 추진 현황
계약내용	계약 금액	일금 삼백오십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10. 1. ~ 2016. 12. 30.
	기타 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 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시례금의 4% 주민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 .

국회의원 유승민 (유승민)
이지연

연구용역보고서

1. 목적¹⁾

북한은 경제 회생을 위해 만성적인 에너지난 해소를 선결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2014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1/26 수준(1990년 공급 규모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석탄과 수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북한은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청정개발체제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10. 1. ~ 2016. 12. 30.
- 연구자²⁾ :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 주요 내용³⁾

북한은 6건의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프로그램 CDM 사업 등 총 8건의 CDM 사업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 등록하였으나, 배출권 할급 실적은 전무하다. 북한은 6건의 수력발전소 관련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메탄가스 관련 프로그램 CDM 사업을 UNFCCC에 등록하였다. 북한은 탄소배출권을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 社와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 社에 연간 총 19.3만 tCO₂eq.,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에 연간 총 15.5만 tCO₂eq. 등 연간 총 34.9만 tCO₂eq.를 이전할 계획이다(등록 기준). 그러나 수력에 연간 총 35.7억 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이 기대되며, 이들 수력발전소가 정상 가동될 경우, 북한의 매년 약 28.7억 원의 판매 수익이 기대된다.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 북한의 CDM 사업 추진 현황 >

구분	내용
등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건이 UNFCCC에 등록 · 일반 CDM(6건) : 함흥청년1호·금야·백두산선군청년2호·예성강4호·5호·3호 수력발전소 · 프로그램 CDM(2건) : 공업폐수 관련·석탄층 메탄가스 활용 및 제거 계획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CDM :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 社 · 프로그램 CDM :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
인증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CDM : 7년(3회까지 갱신 가능), 10년(갱신 불가능) · 프로그램 CDM : 28년(갱신 불가능)
연간 감축량 및 배출권 판매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4.9만 tCO₂eq., 총 64.6억 원의 판매 수익 기대 · 일반 CDM : 19.3만 tCO₂eq., 35.7억 원의 판매 수익 기대 · 프로그램 CDM : 15.5만 tCO₂eq., 28.7억 원의 판매 수익 기대

북한의 청정개발체제(CDM)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16. 12.

이 해 정

12-56

110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유승희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이정윤 • 주소 :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원자력 및 과학기술 객관성 확보 및 독립 감시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계약금액	일금사백만원(₩4,000,000원)
계약기간		2016. 11. 10. ~ 2016. 12. 10.
계약내용	기타 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용역결과물</u>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 역 결과물 각 1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시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5.

국회의원 유승희

[작성자 노성민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원자력 안전을 위한 소통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에서는 안전을 위한 선택의 과정에 주민참여를 필수적인 요소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주민참여를 통한 원자력 안전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국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모색한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 연구자²⁾ :

성명 ; 이정윤

소속 ; 원자력 안전과 미래

직위 ; 대표

3. 주요 내용³⁾

원자력안전을 위한 객관적인 감시는 정부의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를 위한 해외사례를 모색하며 주요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주요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국 사례를 분석할 때 공통적인 요소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주민참여를 통해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보다 객관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을 위한 방안과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원자력 및 과학기술 객관성 확보 및 독립 감시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2016. 12.

이정윤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유승희 의원실
계약자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박인혜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여성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 5,000,000원)
	계약기간	2016. 12. 1. ~ 2016. 12. 23.
	기타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u> or <u>연구용역보고서</u> 1부, <u>용역결과물</u>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시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21.

국회의원 유승희

[작성자 노성민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불특정 다수들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활발한 소통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인터넷 공간의 여성혐오표현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혐오표현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혐오표현의 정의, 규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여성혐오표현의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여성혐오표현의 정의, 인터넷 공간의 여성혐오표현 실태, 혐오표현 및 범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한국의 규제 상황을 검토하고 여성혐오범죄 규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12. 1~12. 23
- 연구자²⁾ : 박인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3. 주요 내용³⁾:

제목: 여성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목차

1. 연구의 목적

- 1) 인터넷 공간의 여성혐오표현의 증가
- 2) 인터넷 공간의 여성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2.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
-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 1) 혐오표현의 정의
- 2)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
- 3) 여성혐오와 여성의 표현의 자유
- 4) 여성혐오사회



3. 인터넷 공간의 여성혐오표현 실태

- 1) 인터넷 공간의 젠더 폭력 유형
- 2) 여성혐오범죄 사례
- 3) 여성혐오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4. 혐오표현 및 범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 1) 국제법
- 2) 지역적 인권협약
- 3) 지역국가

5. 한국의 혐오표현 규제 상황

- 1) 법적.제도적 상황
- 2) 인터넷 공간의 여성혐오표현 규제 관련 법령

6. 여성혐오범죄 규제 방향 제안



유승희 의원 정책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일시: 2016. 12. 21

2016년 12월 유승희 의원과 체결한
「여성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연구보고서가
완성되었기에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박인혜(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발주처	유은혜 의원실
계약자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 : 105-81-98720 · 대표자주민번호 :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상호 : 주식회사마크로밀엠브레인 · 대표자 : 최인수 ·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8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 URL구축
	계약금액	일금 일백이십오만원정 (₩1,250,000원)
	계약기간	2016년 10월 5일 ~ 7일 (3일간)
계약내용	기타사항	<p>◆첨부서류 :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u> <u>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정진석, 주소:서울 영등포 여의도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1 . 05 .

국회의원 유 은 혜

(작성자 오 미 숙)



전자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책번호	2016 권	11 호	
공 급 자	등록번호	105-81-98720			등록번호	116-83-00045				
	상호	(주)마크로밀эм브레인	성명	최인수	상호	국회 사무처		성명	정진석	
	사업장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번지 837타워 10~14층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	서비스		종사업장번호	업태	부동산		종사업장번호		
	종목	리서치및컨설팅			종목	임대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2016	10	31	1,136,363					113,637		
비고										
월	일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0	31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			0	0	1,136,363	113,637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 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1,250,000		0	0	0		1,250,000				

인쇄횟수 : 0

*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전자서명 법에 의거한 전자인증 서명으로 인감날인이 없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교부업무 대행사업자 : (주)더준비즈온 [134-81-08473]

2. 조사 비용

■ 견적비용 : 1,250,000원 (VAT 포함)

견적 항목	단가	비용(원)
1) 웹설문 제작비_학생 및 학부모용	45문항 내외 기준 - 학생용 : 140만원 - 학부모용 : 70만원	770,000
2) 웹설문 제작비_교사용	20문항 내외 기준	215,000
3) 기초통계테이블 분석비	- 학생 및 학부모용 : 45문항 내외 기준 400,000원 X 2종 - 교사용 : 20문항 내외 기준 300,000원 X 1종	265,000
총 합계 (VAT 포함)	[1) + 2) + 3)]	1,250,000

■ 삼기 금액에서 문항 추가에 따라 견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지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년 10월 5일 ~ 7일 (3일간)
- 연구자²⁾ : 주식회사마크로밀앰브레이

3. 주요 내용³⁾

1. 조사 대상

- 고객사에서 학교 또는 기관을 통해 조사 진행
- 학생, 학부모, 교사

2.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 URL 구축 후 전달하여 고객사에서 실사 진행

3. 조사 표본수

- 고객사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예정
- 약 2.5만~3.5만여 명 예상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3. 용역 범위 및 최종 결과물

- 웹설문 제작, 설문지 검수(문구 수정, 설문 로직 체크 위주),
기초통계테이블 분석
- Raw-data (Excel), 기초통계테이블 분석(Excel)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05-81-98720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

대 표 자 : 최인수

개업년월일 : 1999년 04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1670234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 (역삼동, 837타워 10~13층)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 (역삼동, 837타워 10~13층)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종목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업
사이버쇼핑
학술연구용역
리서치및컨설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온라인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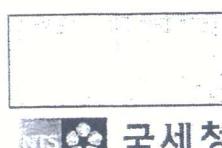
교부사유 : 정정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주소 :

2012년 08월 07일

역삼 세무서장



국세청

설문지(교사용)

ID: _____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현행 교육부의 대학입학전형 개선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전국의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포집)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참여하십니다. 입학전형으로 분주한 시기에 설문지를 요청드려 대단히 조송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지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재학 중인 학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어디에 속합니까?

- ① 서울
- ② 경기
- ③ 인천
- ④ 강원
- ⑤ 충남
- ⑥ 충북
- ⑦ 대전
- ⑧ 세종
- ⑨ 경남
- ⑩ 경북
- ⑪ 부산
- ⑫ 대구
- ⑬ 울산
- ⑭ 전남
- ⑮ 전북
- ⑯ 광주

2. 현재 재학 중인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일반계고(자율형공립고 포함)
- ② 외국어고/국제고
- ③ 과학고/영재고
- ④ 자율형사립고(천국 단위)
- ⑤ 자율형사립고(지역 단위)

A. 다음은 지난 대학입학전형(2016년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 대학입학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복잡하다
- ② 복잡하다
- ③ 단순하다
- ④ 매우 단순하다

4. 학생들이 자신의 전형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의고사 성적
- ② 교과 내신 성적
- ③ 각 전형에 적합한 능력(예. 글쓰는 능력 - 논술전형)
- ④ 희망 대학과의 연관성
- ⑤ 그냥 쉬워 보여서

5. 지금 있는 전형 중에서 사교육이 가장 많이 유발되는 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논술
- ② 학생부교과
- ③ 학생부종합
- ④ 직성고사
- ⑤ 실기위주(수학/과학/어학 등 특기자)
- ⑥ 실기위주(예체능)
- ⑦ 정시(수능)

[**논술**]

B. 다음은 각 수시 전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학생부종합**]

11. 학생부종합 전형이 절수 위주의 선발 탈피, 학교교육의 정착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2.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년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로기만 콜라주세요.

- ① 면접
- ② 내신(교과) 성적
- ③ 학생부 이외 스펙자료
- ④ 수능 성적(최저학력기준)
- ⑤ 자기소개서 및 학생부 비교과 활동
- ⑥ 학교의 종류(예)일반고, 특목고나 학교가 속한 지역

* (①에 응답한 경우, 아래의 6-1번에 응답해주세요.)

6-1. 현재 근무하시는 고등학교의 논술 대비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7. 논술 전형을 운영하는 대수의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 표시해주시십시오.

- ①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 ② 부담 되지 않는 편이다
- ③ 부담이 된다
- ④ 매우 부담이 된다

[별지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발주처	유은혜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대학교육연구소 · 대표자 : 박거용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91 현 진빌딩 7층 · 사업자등록번호 : 206-82-63822 · 대표자주민번호 : · 사업장전화번호 : 02-464-8422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대학 정책 주요 현안 검토보고서
	계약금액	일금 이백만원(₩2,000,000원)
	계약기간	2016. 7. 25. ~ 2016. 10. 14.
계약내용	기타사항	<p>◆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05.

국회의원 유은혜

[작성자 오미숙 ()]



[별지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대학정책 주요 현안과제를 심층분석함. 첫째, 대학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정원외 정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함.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정원 미충원을 고려하여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실제 교육부는 2014년 정부재정지원 사업 평가 시 정원감축 계획(실적)을 반영했고, 2015년에는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A)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비율을 권고했음.

'정원 외 모집'은 "재외국민·외국인, 농어촌지역 학생, 장애인 등을 대학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입학시키는 것"을 말함. 대학정책과 관련하여 '정원 외 모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부가 전체 대학에 정원 축소를 지속적으로 강제하면서도 정원의 화수분(貨水盆)인 '정원 외 모집'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현상은 특히 수도권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의 정원감축 노력이 지방대에 비해 저조한 가운데 정원 외 모집 인원마저 늘리고 있어 정원감축을 통한 양질의 교육 실현을 무색케 하고 있음. 따라서 정원외 정원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시함.

둘째, 입시정책과 관련하여 '정원외 특별전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입학전형을 정원 내·외에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은 오히려 축소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이 확대되어 정원 외 정원의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서울 주요 대학들은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도 기피하고 있어 정부정책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대로 간다면 정원 외 특별전형은 대학들의 신입생 및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원 외 정원 특별전형의 학생모집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셋째,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과제인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와 관련하여 평생학습자 대상 관련전형의 현황을 분석함. 평생학습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전형으로 고졸재직자전형, 계약학과 전형 등이 있음.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평생학습자 특별전형의 학생모집 실태를 파악하고 평생학습자 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 7. 25. ~ 2016. 10. 14.
- 연구자²⁾ : 대학교육연구소

3. 주요 내용³⁾

I. ‘정원 외 정원’ 현황

1. 정원 내.외 정원 증감 현황 - 전체
2. 정원 내.외 정원 증감 현황 - 지역별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3. 정원 내.외 정원 증감 현황 - 규모별
4. 서울 주요 대학 현황
5. 제언

II. '정원 외 특별전형' 현황

1.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 기준
2. 정원 외 특별전형 내역별 모집인원 증감 현황
3. 서울 주요 대학 정원 내.외 기회균형선발 현황
4. 제언

III. '평생학습자 특별전형' 현황

1. 2016년 평생학습자 특별전형 모집 현황
2. 2016년 평생학습자 특별전형 모집 현황 - 대학별
3. 2017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모집 현황 - 수시 기준
4. 제언

IV. 부록

[별지 제28호 서식(1)]

정색

계산서		(공급받는자 보관)		책 번 호		권		호	
공 급 자		등록번호 (법인명) 대한교통이전주		일련번호 성명 박재용		등록번호 호 국회사무처 인명)		-	
상호 (법인명)	주소 사업장 주	서울시 성동구 이화산로 91	주 사업 주	서울시 영등포구 외사당대로 1	지 역 주	부동산 주	임대	임대	
작년 2016	9월 26일	공란수 4	금 액 기부사업	금 액 기부사업	현 금 액 기부사업	현 금 액 기부사업	현 금 액 기부사업	현 금 액 기부사업	
					200	00	00	00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비 고		
		연수용여비				2,00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여금	외상미수금	0	금액을	영수증		

2207-325A 95. 1. 25 승인

182mm×12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 206-82-63822

단체명 : 대학교육연구소

대표자 성명 : 박거용

생년월일 : 1953년 11월 01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1(성수동2가, 현진빌딩 7층)

발급사유 :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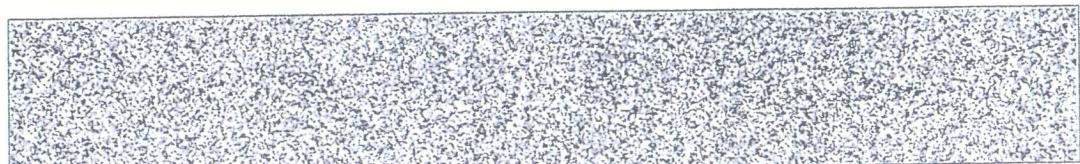


(유의사항)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04월 12일

성동세무서장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12-88

	발주처	유 은 혜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허 경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위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예금주명 : · 은행명
	용역명	대중문화산업관련 행정입법 분석평가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년 11월 11일 ~2016년 12월 01일
계약 내용	기타 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u> <u>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시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5.

국회의원 유 은 혜



[작성자 오 미 숙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적

- 행정입법이 그 수요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행정기관의 자의적, 편의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행정입법 일탈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표를 한 바 있음. 나아가 19대 국회 당시 국회의장의 제안 및 국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및 수정요구가 행정부에 의해 부인되고 있음

-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매년 행정입법에 대한 연례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편임.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전체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으로서,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된 밀접한 분석 검토가 미비함. 특히 대중문화산업 관련 행정입법 조항은 영화관련법 외에는 거의 검토되지 않았음. 이에 본 보고서는 대중문화산업 관련 행정입법 검토를 다룰 것임

2. 계약내용

- 계약기간 : 2016년 11월 11일 ~ 2016년 12월 01일
- 연구자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허 경

3. 주요내용

(용역내용)

- 행정 입법의 현황과 쟁점
- 행정 입법 분석 평가 기준
- 대중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행정입법 분석 평가
 - 1) 대중문화 산업의 범주
 - 2) 법령별 행정입법 영향
 - 3) 유형별 행정입법 분석
- 대안

(주요내용)

1. 행정 입법의 현황과 쟁점

- 행정 입법의 정의와 근거, 현황
-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보고서의 성격과 한계, 연구용역의 목적

2. 행정 입법 평가 기준

- 국회 법제실의 행정입법 분석 평가의 기준
 -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위임범위 일탈, 포괄적 재위임, 행정입법 부작위, 내용의 불합리성, 법령체계의 부적합

3. 대중문화산업에 있어서의 행정입법 분석 평가

- 대중문화 산업의 입법적 범주
 - 대중문화 산업이란?
- 법령별 행정입법 현황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콘텐츠산업진흥법
 - 공연법
 - 게임산업진흥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법
 - 청소년보호법
- 유형별 행정입법 분석

4. 대안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행정입법 조항(특히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수정 또는 개선 필요
 - 행정입법 부작위 관련 조항 즉각 개선 조치
 - 내용의 불합리성 관련 조항에 대한 행정부서의 즉각적인 산업 적합성 검토 연구 및 행정 입법 반영
- 법 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대안 논의 필요

<목차>

1. 행정입법의 현황과 쟁점

2. 행정입법 분석평가 기준

3. 대중문화산업에 있어서의 행정입법 분석 평가

대중문화산업 관련 행정입법 분석평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행정입법상의 제한을 중심으로 -

- 1) 대중문화산업의 범주
- 2) 법령별 행정입법 현황
- 3) 유형별 행정입법 분석
4. 대안

<별첨1> “왜 국회는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하는가” - 삼위법 위반 시행정·시행 규칙 사례 발표(1차) -, 새정치민주연합 정체위원회, 2015.6.1.

11-25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계약자	발주처	유의동 의원실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주식회사 디크리 에이티브 · 대표자 : 전재현 · 주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 : 536-87-00247 · 법인등록번호 or 대표자주민번호 : 110111-5830925 · 사업장전화번호 : 02-836-0263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청탁금지법 App개발(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
		계약금액	일금 삼백오십팔만육천원(₩3,586,000원)
		계약기간	2016. 9. 26. ~ 2016. 11. 11.
계약내용	<p>◆첨부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u></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1. 4.

국회의원 유의동



[작성자 이민지 (이영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161103-10000000-65549310		
등록번호	536-87-00247	종사업장 번호		등록번호	116-83-00045	종사업장 번호	
상호 (법인명)	주식회사 디크리에이티 브	성명	전재현	상호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박형준
사업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83, 6층(신림동)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업태	서비스	종목	홈페이지 제작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이메일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16/11/03	3,260,000			326,000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11	03	홈페이지제작				3,000,000	300,000
11	03	도메인등록				20,000	2,000
11	03	웹호스팅1년				240,000	24,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3,586,000		



본 인터넷을 통해 세금(www.hometax.go.kr)에서 물금 또는 전송 업체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물금사업자인 경우 홈페이지의 "조회/물금>전자세금계산서>제9자 물금사업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536-87-00247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디크리에이티브

대표자 : 전재현

개업연월일 : 2015년 09월 09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5830925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83, 6층(신림동)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83, 6층(신림동)

사업의 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홈페이지 제작

발급사유 : 신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5년 09월 14일

관악세무서장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

- 9월 28일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 또한, 자신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지 국민들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어떤 경우에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 IT시대인 만큼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함.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9.26. ~ 2016.11.11
- 연구자 : 주식회사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 세부내용 : 청탁금지법 관련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및 개발

3. 주요 내용

-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업무연관성 또는 간접적 업무연관성 및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일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셀프-체크기능을 구현함.
-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퀴즈를 통해 위반여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확인 · 청탁금지법 FAQ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음.
-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을 진행중이며,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은 www.clean928.com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연구용역 결과물

- 청탁금지법 App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
(www.clean928.com) 에서도 확인 가능

메인화면		
셀프체크		
내공키우기	적용대상 확인하기	청탁금지법 Q&A

11-09

[별지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빌주처	유의동 의원실
계약자	계약상대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주)베스트사이트 · 대표자 : 최창환 · 주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 : 120-86-06883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87481 · 사업장전화번호 :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계약내용	용역명	대통령 탄핵 및 개헌 관련 시민여론조사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기간	2016. 12. 4. ~ 2016. 12. 5.
	기타사항	<p>◆첨부서류: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 116-83-00045, 법인명: 국회사무처, 성명: 박형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5.

국회의원 유의동



[작성자 이 민 지 (서명)]

승인번호 : 20161214-41000096-15076405

관리번호 : TX2016126303741

전자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책번호	2016 권	12 호		
						일련번호	4			
공 급 자	등록번호	120-86-06883			등록번호	116-83-00045				
	상호	(주)베스트사이트		성명	최창환	상호	국회사무처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52 302호(잠실동, 도원빌딩)			받는자	사업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	서비스.제조업		종사업장번호		업태	부동산			
	종목	시장조사, 소프트웨어개발, 출판외				종목	임대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2016	12	14	4,545,455				454,545			
비고										
월	일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2	14	평택시 정치의식 조사						4,545,455	454,545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 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5,000,000		0	0	0	5,000,000					

인쇄횟수 : 0

※ 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전자서명 법에 의거한 전자인증 서명으로 인감날인이 없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교부업무 대행사업자 : (주)더준비즈온 [134-81-08473]

[별지13]

여론조사 개요

1. 목적¹⁾

대통령 탄핵 및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역

- 조사대상 : 경기도 평택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
- 표본크기 : 1,001명(유효표본, 응답률 5.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pm 3.10\%$
- 조사일자 : 2016년 12월 4~5일(2일간)
- 조사기관 : (주)베스트사이트
- 주요내용²⁾ : △대통령 거취에 대한 의견 △탄핵 표결 의견 △개헌 의견

3. 결과 및 방향³⁾

- <탄핵 표결 의견>: 하야 시점에 대한 여야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탄핵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7%가 ‘찬성한다’라고 응답함.
- <개헌 의견>: 개헌에 대한 의견으로는 ‘찬성해야 한다’가 64.0%, ‘반대해야 한다’가 22.5%로 나타났음.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로 ‘남성, 전 연령층, 팽성 및 고덕/오성 거주자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1) 여론조사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

2) 여론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3)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출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 방향 등을 제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20-86-06883

법인명(단체명) : (주) 베스트사이트

대 표 자 : 최창환

개업연월일 : 2000년 06월 02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1987481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52, 3층(잠실동,
도원빌딩 3층 302호)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52, 3층(잠실동,
도원빌딩 3층 302호)

사업의 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소프트웨어개발
출판업, 출판판매업
자료 처리업, DB구축
인터넷, 서버임대업
학술연구용역업
시장조사, 여론조사
교육서비스업, 교육위탁업

제조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발급사유 : 정정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5년 03월 24일

잠실세무서장



평택(을) 지역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16. 12. 5

BESTCite,
Public opinion poll Institute

100

[별지11]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사업자인 경우)

	발주처	유의동 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 (주)베스트사이트 · 대표자 : 최창환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길 52, 3층(잠실동, 도원빌딩 3층 30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 : 120-86-06883 · 법인등록번호 : 110111-1987481 · 사업장전화번호 : · H·P번호 : · 사업자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 은행명 :
	용역명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용역
	계약 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 기간	2016. 12. 1. ~ 2016. 12. 19.
계약 내용	기타 사항	<p>◆첨부서류 : 전자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일 경우) 또는 계산서(면세사업자일 경우)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p> <p>◆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항목의 기재사항 (등록번호:116-83-00045, 법인명:국회사무처, 성명:박형준,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부동산, 종목:임대)</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2. 19.

국회의원 유의동

[작성자 이민지] (서명)



승인번호 : 20161221-41000096-16069333

관리번호 : TX2016127296369

						책번호	2016 권	12 호	
						일련번호	12		
공 급 자	등록번호	전자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등록번호	116-83-00045			
	상호	(주)베스트사이트	성명	최창환	상호	국회 사무처	성명	우윤근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길 52 302호(잠실동, 도원빌딩)			사업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업태	서비스, 제조업	종사업장번호		업태	부동산	종사업장번호		
	종목	시장조사, 소프트웨어개발, 출판외			종목	임대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2016	12	21	4,545,455				454,545		
비고									
월	일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2	21	국민정책 여론 조사					4,545,455	454,545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 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5,000,000		0	0	0	5,000,000				

인쇄횟수 : 0

※ 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며, 전자서명 법에 의거한 전자인증 서명으로 인감날인이 없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교부업무 대행사업자 : (주)더존비즈온 [134-81-08473]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20-86-06883

법인명(단체명) : (주) 베스트사이트

대표자 : 최창환

개업연월일 : 2000년 06월 02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1987481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52, 3층(잠실동,
도원빌딩 3층 302호)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52, 3층(잠실동,
도원빌딩 3층 302호)

사업의 종류 :

업태

서비스

제조업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종목

소프트웨어개발

출판업, 출판판매업

자료 처리업, DB구축

인터넷, 서버임대업

학술연구용역업

시장조사, 여론조사

교육서비스업, 교육위탁업

발급사유 : 정정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15년 03월 24일

잠실세무서장



국세청

[별지14]

연구용역보고서

1. 목적¹⁾

우리나라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현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한 우선 순위와 각 정책별 세부전략에 대한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년 11월 28 일 ~ 12월 21일
- 연구자²⁾ : (주)베스트사이트 최창환 이사

3. 주요 내용³⁾ (목차)

1.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 2) 조사 대상/방법
 - 3) 주요 조사내용
 - 4) 응답자 현황
2. 주요 조사 결과 요약
3. 조사 결과 분석
 - 1) 주요 국가 정책목표 우선 순위
 - 2) 주요 국가 정책목표의 세부 전략 우선 순위
 - 3) 사회에 대한 인식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보고서

2016. 12.

10-16

소규모용역비 지급신청서 (계약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발주처	윤관석의원실
계약자	계약 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김동영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및 직위 : 사회여론조사연구소 연구실장 · 직장 및 자택전화번호 : - 직장 : 02-785-7121 - 자택 : · H·P번호 : · 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김동영 · 은행명 : 농협은행
	용역명	건설산업 직접시공제 확대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로·철도 건설의 민자사업 현황에 관한 연구
	계약금액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계약내용	계약기간	2016. 8. 16. ~ 2016. 9. 19.
	기타사항	<p>◆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개인 통장사본 1부, <u>여론조사개요 or 연구용역보고서 1부,</u> <u>용역결과물 1부(번역물의 경우 번역대상 원본 및 번역 결과물 각 1부)</u></p> <p>◆용역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용역 수탁자에게 직접 입금 (기타소득세 : 시례금의 4%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후 입금)</p>

※ 상기 내역과 같이 용역결과물을 검수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016. 10. 10.

국회의원 윤관석

[작성자 이 유 정 (서명)]



연구용역보고서

1. 목 적¹⁾

건설산업 직접시공제 확대를 위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확대방안을 논의

2. 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6.08.16.~2016.09.19
- 연구자²⁾ :

3. 주요 내용³⁾

1) 건설산업 직접시공제 확대를 위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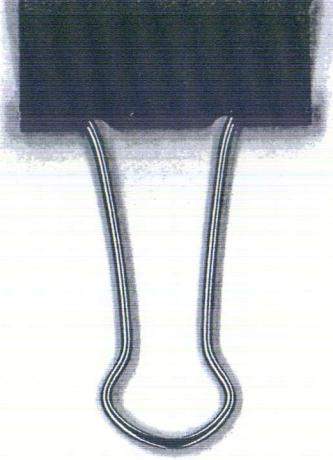
1장. 직접시공제도 도입 개요	8
2장. 하도급 규제와 공공발주방식의 개요	17
3장. 해외 주요 국가의 직접시공 제도 현황	22

1) 연구용역의 취지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기재

3)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목차 등을 기재

2)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에 관한 논의	
1장. 적정임금제도의 개념과 해외 주요 제도 소개	8
2장. 적정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 입법 논의 사항	17
3장. 국내 여건을 고려한 건설산업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	27
3) 도로.철도 건설의 민자사업 현황 및 향후방안	
1장. 민간투자사업의 종류 및 개요 등	6
2장.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개요 및 현황	13
3장. 법적근거 및 개정 현황	15
4장. 개선과제	31



건설산업 직접시공제 확대를 위한 논의

- 국내제도 현황과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16. 9.

김 동 영